

3·1 운동에서의 폭력과 그 함의

반(反)폭력이 될 ‘혁명적 폭력’의
상상과 관련하여

김영범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전공
kint@daegu.ac.kr

- I. 머리말: 문제설정과 그 맥락
- II. 3·1 운동에서 폭력시위의 출현과 빈발
- III. 민중적 폭력의 저변과 내면
- IV. 3·1 운동 이후 폭력항쟁 노선의 재발견과 정립
- V. 혁명적 폭력을 향하여
- VI. 맺음말: 폭력과 평화 사이의 반폭력

I. 머리말: 문제설정과 그 맥락

이제 곧 100주년을 맞으면서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여러 각도에서 되물어질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필시 '인권과 평화라는 시대정신과 관련지어서 이리라. 안 그래도 그런 방향의 사고가 진작부터 있어왔으니, 3·1 운동의 '비폭력성을 부동(不動)의 사실로 여기고 그에 대한 상찬을 밀도로 삼아서였다. '민족대표'들이 '비폭력 원칙'을 표방했음에서 가능해진바 '세계사 최초의 비폭력혁명'이었고 '무혈혁명'이기도 했다는 의미부여 또는 주장이 수반되기도 했다. 비폭력이 3·1 운동의 '실패' 원인 중 하나였고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한때의 비판조차도 입장은 상반되나 사실인식에서는 상동인 것이었다.

그런 터에 '3·1 운동에서의 폭력' 문제를 새삼 거론함은 시대착오적 언술이나 '반(反)시대적 고찰'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¹⁾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물음이 아직도 가능하며 유효한 바 있다는 소견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3·1 운동의 전체상을 '비폭력적 운동'으로(만) 확고히 규정지을 수 있을까? 그런 성격규정과 주장은 3·1 운동의 실제와 얼마만큼 부합하고 근거 있는 것일까? 만약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고 왜 그랬던가? 그것이 띤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등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3·1 운동의 인식론과 연구사에서 폭력과 비폭력 문제는 다루기 쉽지 않았고 그만큼 미묘한 것이었으며²⁾ 그런 중에도 논의축이 수차 바뀌고 옮겨져 온 사실 자체가 실은 이런 물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 폭력 문제에 대한 근간의 인식 지형이 다음과 같다는 토르가 있었다. "우리는 폭력보다는 비폭력을, 갈등과 대립보다는 상호적 인정과 관용의 덕목을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선호한다.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폭력에 찍힌 부정적 낙인은 폭력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금지로, 혹은 폭력에 대한 원천적인 '사유금지'(Denkerbot)로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김현, 「폭력 그리고 진리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제2호(2014), 7쪽)

2) 이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정면에서 다룬 논의로는 愼鏞廈, 「3·1 독립운동의 非暴力方法的 사회적 배경과 社會的 조건」, 『3·1 運動과 獨立運動의 社會史』(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과 신용하, 「3·1 독립운동의 쟁점」,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경인문화사, 2006)이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에서의 폭력노선과 비폭력노선 문제를 무장투쟁노선과 비무장노선의 분립 및 각축으로 치환시켜 다룬 글도 나온 바 있는데(강만길, 「독립운동의 폭력노선과 비폭력노선」, 『외국문학』 제11호(1986)), 3·1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의 통설을 따르면서 간략히만 언급되었다.

3·1 운동을 중심에 두는 독립운동사 편술 작업이 일찍이 시도되어 첫 결과물이 1920년에 출간되어 나왔고,³⁾ 그로써 민족사적 관점에서의 3·1 운동 상(像)이 일차적으로 정립되었다. 그로부터 '순연(純然)한 비폭력운동설이 기원하여 20여 년간 임시정부 계열의 인식의 추로 삼아지다 8·15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우익진영의 3·1 운동 담론의 기본 축으로 부상하였다.'⁴⁾

1940년 전후의 재중국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도, 3·1 운동 때 폭력이 적극적으로 행동화되지 못했다거나⁵⁾ "우리에게 무력이 없어서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강적을 대항케 되었던 것"이라는⁶⁾ 언설이 발해졌다. 혁명은 유희적이며 무장봉기("全民武裝的 총궐기")를 요하는데 3·1 운동은 폭력이 아니고 평화운동에만 의존하여 그 조건을 결여했다는⁷⁾ 비판조의 논평도 있었다. 8·15 광복 직후의 조공(朝共) 계열 사회주의자들도 무장봉기 전술 배제가 3·1 운동의 실패 요인의 하나였음을 논급하였다.⁸⁾ 사상적 입각점과 함의는 서로 달랐을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다 비폭력운동 설과 동계인 것이었다.

3) 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上海: 維新社, 1920)(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소명출판, 2008))를 말한다.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국제선전을 의도하고 일제의 비인도적 탄압 만행을 고발함에 역점을 둔 그 책에서는 한국인들이 맨손으로 평화적 만세시위를 벌였을 뿐으로 여하한 폭력행동 없이 막대한 희생을 치렀음을 다각도로 서사하고 강조도 하였다.

4) 1946년 3월 1일 서울 종로의 보신각 앞에서 우익진영만의 행사로 열린 '제27회 독립선언기념 축하식'에서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 의장 자격으로 式辭를 한 李承晩은 3·1 운동을 '세계의 처음 되는 非暴力革命'으로 호명하고, "우리 광복에의 기초를 세운 非暴力인 시위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民族新生の 國慶日인 三一節」, 《東亞日報》, 1946년 3월 1일자; 「非暴力革命의 結實」, 1946년 3월 2일자). 전날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3·1 운동이 '非暴力革命'을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자기식의 의미부여를 했고, "세계에서 비폭력주의의 元祖를 인도의 간디氏로 말하나 사실 그 날자를 상고해보면 우리 만세운동이 처음으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고 주장했다(「우리의 己未運動은 世界 無抵抗의 시초」, 《東亞日報》, 1946년 3월 1일자). 이런 인식과 주장은 『주미외교위원회 통신』 제24호(1943년 2월 22일)에 실린 무기명 칼럼 「3·1 정신」(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2007), 287-289쪽)에 피력된 주장의 복제본이면서 확장판이기도 했다. (밑줄은 인용자)

5) 遠, 「3·1 運動의 主動力」, 『韓靑』 제2권 제3기(南京: 韓國國民黨 青年團, 1937), 56쪽.

6) 「三一節第22週年紀念宣言」, 『光復』 제1권 제2기(重慶: 韓國光復軍 總司令部 政訓處, 1941), 4쪽.

7) 李貞浩, 「現階段朝鮮社會和朝鮮革命運動(四)」, 『朝鮮義勇隊』 제22기(桂林: 朝鮮義勇隊 總隊部, 1939), 5쪽; 李貞浩, 「朝鮮'三·一'大革命運動簡史」, 『朝鮮義勇隊』 제41기(重慶, 1942), 7쪽.

8) 이에 대해서는 박종린,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 운동 인식」, 『서울과 역사』 제99호(2018)이 상세하다.

하지만 그와는 상당히 다른 인식에서 나오는 언술도 있었다.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 계열의 독립운동자들이 “전민족이 총궐기한 대시위운동(大示威運動)이 폭발하더니 격렬한 폭력적 직접행동으로 전변(轉變)하였다”거나⁹⁾ “무저항·비폭력 시위운동이 금세 대규모 폭동으로 비화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혈충돌이 발생”했다고 회고하면서 3·1 운동의 주된 성격은 “전민족적 유혈폭동·유혈투쟁”이었다고 규정한다¹⁰⁾ 것이 그렇다.

후자와 비슷한 관점의 입론은 1949년 이후의 북한 역사서에도 등장했다. ‘무력항쟁 결여설은 계승·견지하면서도 3·1 운동 때 민중이 들고 일어나 가열 찬 폭력행동으로 일제에 맞서고 타격도 했다는 ‘인민봉기론과 ‘폭력투쟁’설을 제시한 것이다.¹¹⁾ 흔히들 ‘폭력’ 개념에 포섭시켜 같은 범주로 간주하는 ‘무력을 전자로부터 분리해내고, 후자는 없었지만 전자는 있었음을 논증하려 했으니, ‘비폭력운동’설에 분명한 이의를 달고 배척한 셈이다. 남과 북의 3·1 운동 인식에 명확한 분기점이 생기면서 쟁점화의 가능성도 열린 것이었다.

그 후 1960년대 말에 국내 사학계에서 ‘민중운동으로서의 3·1 운동’에는 폭력행동이 적지 않은 비중을 점했음을 자료에 입각해 보여주는

9) 李達, 「三十年來的朝鮮民族解放運動(上)」, 《救亡日報》, 1939년 6월 21일자(『中國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331쪽). 그는 11세 때 국내 향리에서 3·1 운동을 겪었다고 한다(達, 「我與三一運動」, 《救亡日報》, 1939년 3월 1일자(『中國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1, 320쪽).

10) 1939년 중국 쿠이린(桂林)의 ‘조선혁명자들은 3·1 운동이 “민족적 大流血鬪爭으로서…… 8개월 동안 끊임없이 시위와 暴動”이 벌어졌음을 말하였고(「三一運動第二十週年紀念日敬告中國同胞書」, 《救亡日報》, 1939년 3월 1일자), 1940년 충칭(重慶)의 ‘某조선혁명단체 책임자’는 1919년 3월 1일을 “조선인민이 英勇한 反일유혈투쟁을 일으킨” 날로(「朝鮮獨立二十一年紀念旅川各團體舉行紀念會」, 《救亡日報》, 1940년 2월 29일자), 李達도 “전 민족적 反일시위와 流血暴動을 일으킨” 날로(李達, 「三一運動在朝鮮革命史上劃時期的意義」, 《救亡日報》, 1940년 3월 1일자) 표상하였다(기사 인용은 각각 『中國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1의 319쪽·347쪽·348쪽임). 앞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이사 겸 조선의용대 총대부의 정치조장인 金星淑도 “맨손의 군중이 도처에서 적 헌병과 유혈투쟁을 벌이고 폭동을 일으켰으니, 3·1 대혁명의 서막은 그렇게 열린 것”이라고 회고했다(星淑, 「三一運動小史」, 『朝鮮義勇隊通訊』 제5기(1939), 5쪽). (밑줄은 인용자)

11) 1949년 白南雲 등 8인의 공동저작으로 나온 『朝鮮民族解放鬪爭史』(3·1 운동 부분은 金承化가 집필)와 1961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펴낸 『朝鮮近代革命運動史』(3·1 운동 부분은 全錫淡이 집필)가 대표적이다. 홍종욱의 상세한 분석(『북한 역사학의 3·1 운동 인식』, 『서울과 역사』 제99호(2018)이 이미 나와 있으니, 구체적 서술을 예증해보임은 약한다.

논의가 나왔다.¹²⁾ 암암리의 금기가 그때 처음 깨진 것이다. 그 논점을 잇고 되살리는 연구는 한참 뒤인 1980년대 말에 가서 이루어졌다. ‘민중사학’ 입장의 몇몇 소장 연구자가 일제자료들 속에 묻혀 방치되어 온 기록과 사례들을 끄집어내 활용함에 의해서였다.¹³⁾ 그들은 3·1 운동 때 적어도 평안도·경기도·경남 지역에서는 민중의 폭력행동이 빈발했음을 부각시켜 논급하였다.

그 무렵 주로 신진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3·1 운동의 지방사례 탐색과 현지답사 기반형의 연구들에서도 시위운동의 ‘공세성’ 증대와 그에 수반된 폭력화 추세가 발견되어갔다. 평화적 만세시위가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 대응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폭력성을 ‘약간’ 띠게 된 정도가¹⁴⁾ 아니라 계획적으로 감행된 공세적 폭력시위 사례가 상당수 있었음이 실증된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나온 인식전환의 계기와 그 바퀴살 붙이기는 학계 주류의 일부 저항감을 낳고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지방사례의 실증적 연구결과들과 잇대지면서 인식의 좌표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비폭력에서 폭력으로의 전환’이 새로운 논의축이 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3·1 운동에서의 폭력·비폭력 문제가 말끔히 정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17년도에 검인정 본으로 간행된 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다음과 같은 서술이 그 예증일 수 있다.

12) 朴成壽, 「3·1 運動에 있어서의 暴力과 非暴力」, 東亞日報社 編, 『3·1 運動 50周年 紀念論集』(1969); 千寬宇, 「民衆運動으로 본 3·1 運動」, 같은 책.

13) 1989년 한겨레신문사 주최의 3·1 운동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이윤상·이지원·정연태가 발표한 개별논문 3편(각각 평안도·경기도·경남 지방을 다룸)과 총설 격의 공동논문 1편을 말한다. 이 글들은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청년사, 1989)에 수록되었다.

14) 1968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韓國獨立運動史 2』에는 “시위를 전개하는 군중은 몇 곳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무저항의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을 따름이지 총검을 가진 일군에게 처음부터 저항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 대하여 무차별의 사격을 가하여 사상자가 속출하므로 이에 격앙된 군중이 간혹 鎗, 곤봉 혹은 돌을 들고 경찰관 서나 헌병관서에서 물러가 항의 시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런 사실을 갖고 일제는 군중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득이 군대를 출동시켜 발포 해산시켰다고 발표한 것이다.”(정음문화사 판, 213쪽)라고 교시하듯 서술되어 있었다. (밑줄은 인용자)

15) 명시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른 연구로 맨 처음의 것은 이정은의 「안성군 원곡·양성의 3·1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1987)이었다. 다른 몇몇 사례들에 대한 그의 후속연구 결과는 『3·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국학자료원, 2009)에 들어 있다.

3월 중순을 넘어서자 시위는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는 시위가 절정에 달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면사무소나 주재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3·1운동은 비폭력·무저항주의로 출발하였지만, 시위가 확산되면서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¹⁶⁾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끄럽게 읽히는 바로 그 지점에 미완결의 어떤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있다. 3·1 운동의 전체상 조형에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중요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면서 시점 특정에도 오류가 범해졌음과, 사실과 맞지 않는 규정어가 그대로 쓰인 대목 등이 그러하다. 당시의 전국적 상황을 두루 살펴보면, 중앙지도부와 서울 중심의 비폭력 원칙을 기각하거나 무효화하듯 폭력행동으로 나선 경우가 3월초부터 북부지방의 농·산촌 지대와 일부 도시들에서 상당수 있었음에서다.

어쩌면 3·1 운동의 총체적 형상은 아직도 분단체제의 그늘로 인해 일부 가려진 채 제시되고 있는지 모른다. 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모종의 체제이념 및 세계사적 연상이 작용하니 더욱 그리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까. 고정관념처럼 굳어있던 통설을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점차 압도해 오고는 있었지만, 모양새 좋을 절충적 봉합으로 그치고 더 이상은 나아가지 않으려 한 것처럼도 보인다.

그런 견지에서 이 글은 3·1 운동에서의 폭력 문제를 재검토하여 정확한 사실인식을 기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갖는 여러 의미도 추출해봄을 1차적 목표로 한다. 그 다음은 3·1 운동에서의 폭력이 후속 독립운동/혁명운동에 어떤 효과를 발했으며 그 후 20여 년간의 사상사와 정신사의 문맥에서 어떤 함의를 띠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16) 최준채 외 4인, 『고등학교 한국사』(리베르스쿨, 2017(초판은 2014)), 284쪽.
다른 교과서들이나 근래 나온 대학교재 수준의 근대사 개설서들의 서술도 대체로 이와 같다.

II. 3·1 운동에서 폭력시위의 출현과 빈발

1. '비폭력 원칙'의 의미와 한계

폭력과 비폭력은 일종의 개념적 도구일 뿐, 실제로는 늘 뒤섞여 있거나 무시로 교차되는 것처럼도 보인다. 어쩌면 비폭력이란 유사 이래 인간 삶의 상수가 되어온 폭력의 흐름에 어느 순간 제동을 걸고 단면화해 찍어낸 한 장의 필름 같은 것일 수 있다. 폭력적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간주체의 자각과 몸부림의 한 징표로 말이다. 3·1 운동을 기획하고 준비해간 민족대표들이 내걸었던 '비폭력 원칙'도 실은 그런 유의 것이었는지 모른다.

선행연구에서는 그 원칙이 대일 무장투쟁 혹은 전쟁을 벌이는 것이 국내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승산이 없음을 의식해서 나왔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 불가능하거나 승산이 없다면 비무장이나 부전(不戰)을 굳이 원칙으로 내걸 것도 없으리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부족해 보이는 바 있다. 그것보다는 독립운동의 '대중화' 방법이 될 만세시위 바로 그것에 적용시킬 현실적 행동지침으로 제시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옳지 않겠는가 한다. 그래서 별도로 <공약 3장>을 설정하고, "배타적 감정으로 내달리지 말 것"과 "질서 존중"을 명기해놓은 것이겠다. 독립선언서의 한 대목에 나오는 "함분축원(含憤蓄怨)"은 "구구한 감정상 문제"로 치부되고, 그 폭발은 제어되길 요구받은 것이다.

3월 1일자로 인행되어 나와 전국 각지로 비밀리에 배포된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제1호도 "아(我) 2천만 민족이 최후 1인이 잔여하더라도 결단코 난폭적 행동이라던지 파괴적 행동을 물행(勿行)할지이다. 1인이라도 난폭적 파괴적 행동이 유(有)하면 시(是)난 영천고불가구(永千古不可求)의 조선을 작(作)할지니 천만 주의하고 천만 보중할지이다."는¹⁷⁾ <대표 제씨(諸氏)의 신탁(申託)>을 실어 내보냈다. 이는 시위대중이 '난폭·파괴적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민족대표들이 예측하고

17) 이정은, 『3·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국학자료원, 2009), 174쪽에서 재인용.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3·1 運動篇 其三)이하 『국도 민운사』 3』(1979), 4쪽에는 경찰이 수거한 원본의 일본어 역문을 다시 국역하다보니 표현이 많이 달라져 버린 것이 실려 있다.

매우 우려도 했음을 말해준다. 어디까지나 평화적 시위로 해야만, 일본을 적대시함 없이 ‘동양평화’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즉시독립을 열망한다는 “우리 민족의 참뜻”을 제대로 잘 드러내어,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 획득이라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전술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아무튼 3·1 운동 초기에는 그 원칙을 준행하려는 노력이 서울과 평양(平壤) 등지에서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¹⁸⁾ 경남지역 시위운동의 초기 국면에서도 충무(忠武)·하동(河東)과 창녕군(昌寧郡) 영산면(靈山面)에서 만세시위 주도자들이 ‘폭행’ 또는 ‘폭동’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의사를 격문, 자체 제작 독립선언서, 서약서 등에 강한 어조로 투영시켰다.¹⁹⁾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다 헤아려보면, 그 원칙을 저버려 기각하거나 무시·무효화하듯이 사태가 전개된 경우가 무척 많았다. 평화적 시위에서 폭력적 시위로의 급전 양상이 도처에 나타났고, 처음부터 폭력행동을 불사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자료를 다시 들춰보며 재검토해봐야만 할 이유이다.

2. 폭력화의 계기와 경로

3월 1일에 지방에서도 만세시위가 벌어진 곳은 평남·평북·함남의 6개 (준)도시들이었고, 기독교인·천도교인·교사·학생 중심이었다. 그 중 평양·진남포(鎭南浦)·안주(安州)·선천(宣川)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헌병경찰 당국과 지방장관들이 올린 일일보고문에는 3월 1일 첫날부터 연일 조선인들이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창유리를 파괴했다고 적혀있었다. 일본 신문들도 그대로 받아썼다. ‘투석’·‘관서건물 또는 기물 파괴’·‘소방수나 경관 폭행’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보도도 3월 1일 이후의 며칠

18) F. A. 매켄지 저, 신복룡 역주, 『한국의 독립운동』(집문당, 1999)의 제15장, 특히 220-221쪽, 240-241쪽, 243쪽; 「소요의 방법은 매우 교활하다」, 《大阪朝日新聞》, 1919년 3월 8일자; 「지방은 폭도, 경성은 평온」, 《大阪朝日新聞》 1919년 3월 15일자, (윤소영 편역, 『日本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하 ‘일본신문 기사집』 I], 118·148쪽 등을 볼 것.

19) 權南善 외 8인, 「同胞에 檄하노라!!」(충무); 「大韓獨立宣言書」(하동); 이정은, 「창녕군 영산의 3·1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1988) 참조. 앞의 2건 문서는 독립기념관 소장본임.

사이에 수차 있었다. 3월 3일에는 조선총독과 헌병대사령관이 각기 본국의 육군성으로 보내는 전보문에 ‘폭도(暴徒) 용어를, 경무총감부에서 따로 만든 극비보고에는 ‘폭민(暴民)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²⁰⁾ 일본 언론이 곧 따라 썼다.²¹⁾

그 용어들은 피지배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지배자가 정보의 진위와 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강경대처의 의도로 짜서 쓰는 프레임의 반영인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안다. 일제가 한국 의병을 ‘폭도’로 지칭하며 ‘대토벌작전’을 벌였던 것도 그런 예다. 하지만 의병들의 항전활동에 객관적 의미의 폭력이 포함되고 있었음도 사실이긴 하다.

그러면 3·1 운동의 시위대에 ‘暴’字가 따라붙게 된 연유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였는가?

여기 시사점을 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3월 2일 평남 남동부 산간지대 어구의 중화군(中和郡) 상원(祥原)에서 벌어진 시위이다. 관현당국의 일일보고에서 ‘폭도’란 말이 처음 쓰인 사례이고,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파괴했다고 되어 있었으며,²²⁾ 순시 나와 있던 중화경찰서장과 순사부장을 납치하고 주재소를 방화 소훼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²³⁾ 이에 대한 독립운동사의 서술은, 이날 아침에 시위대가 주재소에 몰려가 퇴거를 요구하니 경찰이 해산시키려 했고 이에 시위대가 역습을 감행하여 총기와 탄약을 탈취했으며, 순시 중이던 경찰서장을 포박 납치하고 주재소를 포위하여 대치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다 평양 경무부에서 급파된 군경응원대에 총기와 탄약을 도로 뺏기고 39명이 피검되었다 한다.²⁴⁾

20)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3·1 運動篇 其一)』(1977)(이하 『국도 민운사』 1'), 5-7쪽;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6: 朝鮮 1』(東京: みすず書房, 1967), 90쪽;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民族主義運動篇』(東京: 原書房, 1967), 315쪽 참조. 용례로 봤을 때 일제 당국의 폭도 개념은 “흥기를 소지하고 폭행을 감행하는 자”였다(『국도 민운사』 3, 171쪽).

21) 시위운동에 관한 3월 3일자 첫 보도에서부터 《大阪朝日新聞》은 기사 제목과 소제목에 ‘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차 썼고, 3월 7일자 여러 기사에서도 ‘폭동’·‘폭민’·‘폭도’라는 표현으로 상황을 묘사했다(『일본신문 기사집』 I, 80쪽 및 105-112쪽 참조). 『大阪毎日新聞』도 3월 3일자 첫 기사 본문에서 시위 군중을 ‘폭도’로 표현했고, 3월 7일자 기사들의 여러 곳에서 ‘폭민’·‘폭도’라는 단어를 노출시켰다(윤소영 편역, 『日本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II(2009), 114쪽 및 142-144쪽 참조).

22) 『국도 민운사』 1, 5쪽; 『국도 민운사』 3, 8쪽.

23) 「각 지방의 불온상황」, 《大阪朝日新聞》, 1919년 3월 7일자 (『일본신문 기사집』 I, 109쪽).

2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3·1 운동사 상)(1971), 384쪽. 이후로 이 책을 전거로 삼을 때는 본문 서술 안에서 『독립운동사』로 표기하고 쪽수만 밝히

이튿날 3일 새벽에 구금자 탈환 목적으로 기독교인과 주민들이, 오후에는 천도교도 주도의 시위대가 주재소를 습격하니 군대가 격퇴하고 ‘폭민’ 1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기관보고 되었다.²⁵⁾ 이에 대해 『독립운동사』(384쪽)의 서술에는, 오후 3시경 기독교인 중심으로 시가행진을 벌이고 주재소를 습격하여 피검자 탈환을 시도하니 백병전이 벌어져 시위대 측에 일부 사상자가 발생하고 서장은 풀려났으며, 오후 4시경에 천도교인이 앞장선 시위로 일본군과 충돌하여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3월 3일 경기도 개성(開城)에서 있었다고 보고된 시위대의 폭력행동도 눈길을 끈다. 1천여 명의 군중이 일몰 후에 경관과출소를 습격하여 투석하니 유리창이 부서지고 순사 1명이 부상당하자 철도원호대가 출동하여 진정시켰다는 것이다.²⁶⁾ 시위대는 일장기를 불태웠으며, 4일 밤에도 시가행진과 투석전을 벌이며 경찰저지선을 돌파했다 한다.²⁷⁾

3월 4일부터 북부지방의 상황은 험악함 일로로 직향했다. 평남 동부의 산간지대인 성천군(成川郡)에서 약 2천명의 주민이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헌병분대를 습격하여 분대장 중위를 중상 치사케 했고 ‘폭민’ 사상자도 여러 명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²⁸⁾ 『독립운동사』(390-391쪽)에 따르면 4일의 성천 시위는 천도교인 4천여 명이 참가한 것이었는데, 가두시위 후 헌병대로 진격하여 당도하니 헌병과 보조원이 돌연 발포하여 28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다 한다. 그러자 이에 맞서 군중이 도끼와 팽이를 들고 헌병대를 습격하여 주재소장을 난타한 것이라고도²⁹⁾

병기할 것이다.

25) 『국도 민운사』 1, 6·7쪽.

26) 『국도 민운사』 1, 7·8·29쪽; 『국도 민운사』 3, 11쪽; 「조선 다시 소요가 벌어지다」, 《大阪朝日新聞》, 1919년 3월 7일자(『일본신문 기사집』 I, 108쪽) 참조.

27) 김정인·이정은, 『국내 3·1 운동: 중부·북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0쪽.

28) 『국도 민운사』 1, 7·8·30쪽.

「각 지방의 불온상황」, 《大阪朝日新聞》 1919년 3월 7일자, (『일본신문 기사집』 I, 109쪽)에는 군중 200여 명이 헌병분대를 습격하여 유리창 등을 파괴하고 분대원 전부를 격살하자고 절규하니, 헌병대가 발포하여 ‘폭도’ 중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하였고, 헌병분대장 마사이케 가쿠조(政池覺造) 중위가 우측 무릎 밑에 중상을 입고 5일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때 폭민 사망자가 110명, 부상자는 170명에 달했다는 후속보도도 있었다(「헌병분대의 고전」, 《大阪朝日新聞》, 1919년 3월 11일자(『일본신문 기사집』 I, 132쪽).

29) 김정인·이정은, 『국내 3·1 운동: 중부·북부』, 231쪽.

이에 대해 『독립운동사』(390-391쪽)에는 시위대가 난동했다는 것은 허위이고 촌철도

한다.

같은 날, 연해지대인 평남 강서군(江西郡) 증산면(甌山面)에서도 ‘폭도’가 사천헌병대(砂川憲兵隊)를 습격하여 헌병 4명을 살해하고 보조원 주택에 방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³⁰⁾ 『독립운동사』(407쪽)에 기술된 사건내용도 이와 같다. 전날 강서읍내에서 4천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 실탄사격으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으며, 이날은 증산면에서 기독교인 중심의 군중 5백여 명이 시위하다 헌병들이 제지하자 투석으로 밀어붙여 주재소를 파괴하고 소장 상등병 1명과 보조원 3명을 추격하여 살해했고 보조원 집에 불도 질렀다는 것이다.

3월 5일에 헌병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각지의 정황은 이미 경찰서만으로는 진압이 곤란함을 인정하고 군대의 협력방법을 목하 협의 중”이라고 보고한³¹⁾ 것은 이처럼 상호간 충돌과 폭력사태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었음의 방증이다. 이날 이후 3월 10일까지의 상황으로는, 헌병분견소를 폭민이 강습(3월 5일 평남 양덕(陽德)); 경찰관서 습격, 투석하여 창유리 파손, 경관 부상(3월 6일 평남 용강군(龍岡郡) 온정리(溫井里), 3월 6일 개성); 우편국에 투석(3월 7일 평북 철산(鐵山)); 헌병분대(분견소) 습격/침입/돌입폭행(3월 7일 평남 성천, 3월 9일 평남 영원(寧遠), 3월 10일 평남 맹산(孟山), 3월 10일 함남 단천(端川), 3월 10일 함남 신흥(新興))이 연일 보고되었다.³²⁾ 3월 11일 이후의 일주일 어간에도 황해도 안악군(安岳郡) 온정동(溫井洞)과 송화군(松禾郡), 함남 신상리(新上里)와 장진군(長津郡) 고토리(古土里), 함북 명천군(明川郡) 화대동(花臺洞), 경기 가평군(加平郡) 목동리(沐洞里), 경기 양주군(楊州郡) 마석우리(磨石隅里), 충남 공주(公州) 등지의 헌병분견소나 경찰서·주재소의 습격/돌입, 폭행/격투사태가 연이어 보고되었다.³³⁾

이처럼 시위가 폭력화한 사건들의 이념형적 경과를 사례 종합에 의해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에 따라서는 어떤 요소가 결락되거나 순서

없이 맨손시위를 벌였으며, 마사이케 중위의 중상 사망도 일본도를 빼들고 사격을 지휘하다 자기편의 오발탄에 맞은 것이라고 변설하였다.

30) 『국도 민운사』 1, 9·10·30쪽.

31) 『국도 민운사』 1, 9쪽.

32) 이상의 사례들은 『국도 민운사』 1, 9·12·17·20·23·30·51쪽에서 뽑은 것이다. 번잡을 피하여 전거 주를 건별로 달지 않는다.

33) 『국도 민운사』 1, 24·35·41·42·43·49·52·53·54·57쪽 참조.

바뀔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정형을 그려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① 집회 → ②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고창 → ③ 도보행진 → ④ 경찰서·주재소·분견소 앞 쇄도 → ⑤ (시위대가 관서를 포위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형세로) 쌍방 대치 → ⑥ 해산중용과 거부 → ⑦ 강제해산 시도 → ⑧ 투석 대응 → ⑨ 위협용 공포탄 발포, 또는 실탄 사격(으로 사상자 발생) → ⑩ 경찰의 강습 난타와 주동자 검거(시도) → ⑪ 시위대 철수, 해산 → ⑫ (구금자 석방 요구와 발포항의성) 시위 재발 → ⑬ 난투극, 또는 관서로 돌입 → ⑭ 즉각 발포 → ⑮ 관서 함락 후 파괴·방화, 드물게 관원 폭행이나 납치·살해

『독립운동사』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또는 시위 폭력화의 첫 계기랄까 요인으로 본 것은 ⑦이었다. 3월 1일에도 여러 곳 시위현장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한 것은 대략 ⑦에서 ⑩까지의 실황을 말함인 것이다. 그러나 일제측은 ④와 ⑤를 ‘습격’으로 칭하며 폭력화의 첫걸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중립적 견지에서 보면 실제의 폭력행위는 올려 잡아도 ⑧부터인 것이고, 본격적 폭행은 ⑬이나 ⑮에 가서부터이다. 그런데 이 후자와 같은 의미, 같은 양상의 폭력화 기미가 상원에서는 3월 2일부터, 그리고 4일경부터는 평남·북 여러 곳에서 완연했던 것이다.

좀 번잡해진 논의였지만, 중요한 대목이 그로부터 포착된다. 시위의 폭력화는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3·1 운동의 아주 초기에, 3월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위대는 탄압에 즉시 대응하여 폭력행동으로 나아간 경우가 많고, 일단 그리되면 대항폭력의 강도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시위군중은 기세를 올려 공세적이게 되고, 거기에는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폭력시위가 발화점을 넓히면서 빈발케 된 것은 그런 흐름으로였다.

3. 시위의 폭력성 정도와 추이

일제 당국은 조선인들이 폭력을 행하니 강력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시종 고수하였다. 그 논리가 군경 보고문들에 잠복해 있었고, 통계표와 신문기사들에도 스며들곤 했다. 그런 때문에도 3·1 운동의 양상 및 결과에 관한 각종 기록과 통계들이 시위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거나 과장하고 자의적 분류에 의한 과다 집계로 체계적 왜곡을 범했을

개연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일제자료를 이용하고 해석할 때 엄정한 사료비판을³⁴⁾ 먼저 해 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제자료가 영 터무니없거나 전혀 무용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상의 수치들은 그래도 시위운동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갔고 그 폭력성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략 짚어 추리해보는데 도움이 된다.

조선헌병대사령부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가 각 지방의 보고 내용을 종합해 4월 30일에 작성한 <조선소요사건총계일람표(朝鮮騷擾事件總計一覽表)>를³⁵⁾ 보면, 그때까지의 전국 '소요개소'는 618개소, '소요회수'는 848회였다. 그 중 '폭행 소요'가 332회(39.15%), '무폭행 소요'가 516회(60.85%)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폭행과 무폭행의 구분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불명이나 거의 4:6의 비율인 것이었다.

다른 자료인 <조선소요사건경과개람표(朝鮮騷擾事件經過概覽表)>에는³⁶⁾ '폭력운동'이 290회, '비폭력운동'은 486회로 집계되었다. 비율로는 37% 대 63%여서, 앞의 <총계일람표>와 비슷하다. 하지만 인원통계에서는 총 509,402명 중 전자에 299,751명(59%), 후자에는 209,751명(41%) 참가로 집계되어, 거의 그 비율로 역전된 수치를 보여준다. 그 정도로 '폭력운동'의 밀도가 높고 응집력이 강했다는 뜻도 된다.

관한 측의 1차 자료를 가공하여 만든 다른 통계로는³⁷⁾ 시간대별 추이를 엿볼 수 있다. 이미 3월 상순에 총 183회 중 41회(22.4%)가 폭력시위였는데, 중순에 193회 중 53회(26.7%), 하순에 359회 중 129회(35.9%)로 횟수와 비율이 점점 더 증가했고, 4월 상순에는 372회 중 73회(46.5%)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다 4월 중순에 시위회수 자체가 급감하여 60회였고, 그 중 11건(18.3%)만이 폭력시위였다.

일본 육군성이 1919년 9월에 낸 보고문(「조선소요경과개요(朝鮮騷擾經

34) 일제 관헌기록을 한국 쪽의 것 및 선교사들의 당시 기록과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전자의 허위성·기만성을 드러내려 한 하라구치 유키오(原口由夫)의 「三·一運動彈壓事例の研究—警務局日次報告の批判的檢討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제23집(1986)가 그 점에서 인상적이다. 그러나 “3·1 운동의 기본적으로는 비폭력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역편향이 있어서였는지, 일부 무리한 추단도 눈에 띈다.

35) 『국도 민운사』 1, 359-360쪽 참조.

36) 이 자료를 갖고서 작성된 朴成壽, 「3·1 운동에서의 暴力과 非暴力」, 尹炳奭·慎鏞廈·安秉直 編, 『韓國近代史論』 II(지식산업사, 1977), 132쪽의 표5 참조.

37) 이윤상·이지원·정연태, 「3·1 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246쪽의 표2 참조.

過概要)』³⁸⁾에 의하면, 피살된 관헌이 8명에(헌병 6, 경찰 2; 평남과 경기도에서만), 부상자는 158명이었다(헌병 91, 경찰 61, 군인 4, 관공리 2; 평북 18, 황해 30, 경기 22, 충북 20, 경북 13, 경남 18). 파괴(소훼 포함)된 관공서는 278개소였는데, 내역은³⁹⁾ 경찰관서 87, 헌병주재소 72, 군청·면사무소 77, 우편소 15, 기타(금융조합, 일본인 가옥) 27개소였다. 13개 도 모두에서 파괴 사례가 있었고, 그 중 많기로는 경기 80, 경남 38, 황해 27개소 등의 순이었다.

4. 계획적-공세적 폭력시위로

평화적으로 만세시위를 시작했는데 저지되고 탄압받으니 완강히 저항하며 폭력시위로 바뀌어간 사례들이 한 계열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폭력시위를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경우도 적지 아니 있었다. 이 제2계열의 폭력화는 지방 시위운동이 대형화의 면모와 공격성을 뚜렷이 내보임과 궤를 같이한 것이었다. 예컨대, 3월 18일과 19일 이틀 사이에 경찰관서만 아니라 군청·재판소·면사무소를 습격 파괴하고, 나중에는 일인 소학교와 공립보통학교까지 파괴하는 격렬 시위가 경북 안동(安東)·영덕(盈德)·의성군(義城郡) 관내의 여러 면(面)에서 벌어졌다.

공세적 시위의 불길은 3월 19일 경남 합천(陝川)·함안(咸安)·진주(鎭州)와 충북 괴산(槐山), 20일에는 경남 마산(馬山)과 함남 이원(利原)에서 거세게 타올랐다. 21일 이후로는 경남 산청(山淸), 전북 임실(任實), 경기 마전면(麻田面) 및 김포군(金浦郡) 양곡(陽谷), 경북 영양군(英陽郡) 청기동(靑杞洞) 등 거의 전국적으로 번져갔다.⁴⁰⁾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함안군 읍내와 군북면(郡北面)에서는 경찰서와 주재소, 우편국, 학교, 등기소 등의 관공서를 죄다 습격 파괴하고 비치된 각종 수탈용 장부와 비품·집기류를 꺼내다 불 질러 없애며 군수·순사·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살해도 하는, 최고 강도의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합천군 관내 여러 곳의 시위 양상도 거의 그와 같았다. 전통적 유림세력을 포함한 지역 명망가와

38) 『국도 민운사』 1, 259쪽 참조.

39) 金鎮鳳, 『3·1 運動史 研究』(국학자료원, 2000), 85쪽 참조.

40) 『국도 민운사』 1, 60·61·63·64·65·66·72쪽 참조. 이하 세 문단의 다수 사실관계 서술은 일일이 전거를 달지는 않지만 3·1 운동 관계의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종합한 것이다.

유지 자산가, 대성(大姓) 문중의 유력자가 주도했거나 배후 지원한 시위들이 대개 격렬한 양상을 보이며 폭력투쟁으로 나아간 점이 특이했다. 그 기세는 4월 3일 창원군(昌原郡) 진동(鎭東)·진북(鎭北)·진전면(鎭田面)을 넘나들며 무척 공세적으로 진행된 '3진시위'로도 옮겨갔다.

대체로 이 경우들에서는 장년층이 나서서 마을 주민들의 참가를 강제하는 식의 조직적인 동원으로 세를 불러 확보한 후 돌맹이·몽둥이는 물론이고 가래·삽·괘이·도끼·낫 등이 망라된 농기구 혹은 벌목도구를 갖고 전선 절단과 전주 도괴로 통신선을 끊어놓고는 읍내 관공서들에 대한 공격-진입-점거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런 맥락 속에서 4월초에는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현 화성군(華城郡))과 안성군(安城郡)에서도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정면 격돌을 마다않는 선제공격을 일제 통치기구와 그 요원들에게 가했다. 안성군 원곡면(元谷面)의 주민 시위대 1천여 명은 인접 양성면(陽城面)으로 진출하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 방화하여 잿더미로 만들고, 면사무소·우편소와 일본인 사채업자의 집을 파괴했다. "우리 지역만이라도 독립하자"를 목표로 내건⁴¹⁾ 주민봉기이고 폭력항쟁이었다. 이에 경찰과 하급관리들은 도주하여 이틀간 '해방구' 상태가 연출되었다.

호서지방의 만세운동도 폭력화 경향에서 예외적이지 않았다. 강원도와 충북의 여러 곳에서는 화전민이 되었거나 타지에서 숨어 지내던 의병 출신자들이 나타나 파괴적 행동을 종용하고 주도하기도 했다. 도시와 광산지대의 노동자들도 전차발전소에 투석하거나 전화선을 절단하고 채광도구를 파괴하는 등의 저항적 폭력행동을 산발적으로나마 벌였다. 그러기에 폭력항쟁의 출현을 평화적 시위에 대한 일제의 강경진압 조치로만 귀인시키는 진실의 절반쯤을 가려버림과 같은 것이다.

그렇듯 3월 하순 이래 근 20일 동안 지방에서, 특히 경북 동부 및 경남 중·서부의 내륙지대와 일부 연해지대, 그리고 경기 남부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수많은 시위와 집합행동들의 모습은 독립전쟁의 임박을 예고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그만큼 3·1 운동은 단순 만세시위로 그친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서북지방의 여러 중소도시와 농·산촌들에서

41) 원곡면의 동리연합시위 준비 때 무학농민 李德順이 "양성에 일본인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없이 다 내쫓고 우리 지방만이라도 독립자치를 하자"면서 시위계획에 앞장섰다 한다(이정은, 『3·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332쪽(밑줄 인용자)).

그렇듯이, 서울을 제외한 거의 전국적인 범위에서 전민항쟁처럼 되어간 것이다.

III. 민중적 폭력의 저변과 내면

지방 3·1 운동에서 강화되어간 폭력화는 운동의 민중성, 특히 농민층의 적극 참여와 관련 깊었음이 분명하다. 일찍이 수행되었던바 수감자/수형자 통계의 재구성 및 분석에서⁴²⁾ 잘 보였듯이, 시위대 가담 및 조직화의 인적 자원은 소농·소작인 위주의 농민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공급된 것이었다. 그들은 재촌 지주와 유림층을 배척하거나 그들과 스스로 분리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후자의 지도를 받기도 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항일대열의 전면에서 섰다.

1910년의 한일 강제병합에 이은 무단통치 실시와 더불어 식민지 한반도에 들어왔던 ‘장기 군사계엄체제’는 전래의 유교적 공론장과 그것에 잇대어 있던 민본주의 정치문화를 우선 파괴해갔다. 일제가 강행한 촌락재편 정책과 면·리제를 통해 일방적 관치의 수직적 질서가 구축되고 예전의 향촌자율성은 급격히 소거되어갔다. 그 빈자리에 ‘근대적’ 억압장치가 들어섰고, 그것에 둘러싸인 한국인들은 엄혹한 감시와 처벌의 새 폭력시스템 속으로 가뭇없이 끌려들어 갔다. 내리쬐듯 공포되고 무조건 강행되는 신중 법령들은 상시적 포위에 의한 규제로 순치와 순응의 쇠 우리를 만들어가려 했고,⁴³⁾ 그 안에 갇힌 민중은 몸의 원초적 에너지를 외화하고 생각대로 자유롭게 발화할 정상적 기회마저 노상 봉쇄당한 채 놀리어 숨죽이듯 지내야만 했다.⁴⁴⁾ 그런 폭압체제는 도처에 두려움과 체념의 심리를 부식시키기도 했겠지만, 울울한 분노의 정서를

42) 愼鏞廈, 「3·1 獨立運動 勃發의 經緯」, 尹炳奭·愼鏞廈·安秉直 編, 『韓國近代史論』 II, 105쪽; 金泳謨, 「韓國獨立運動의 社會的 性格」, 『亞細亞研究』 제59호(1978).

43) 3·1 운동 이전의 조선에서 일본이 행한 ‘철권 정치’ 혹은 ‘폭정’의 실태가 F. A. 매켄지 저, 신복룡 역주, 『한국의 독립운동』(집문당, 1999), 157-173쪽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44) 1911년에 18,100여 건이던 즉결처분이 1918년에는 82,100여 건으로 4.5배 이상 급증했다는(이종민, 「1910년대 경성 주민들의 ‘죄’와 ‘벌’: 경범죄통계를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제17권 1호(2001)) 데서도 억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민중의 마음속에 계속 누적시켜갔다.

배출구를 잘 얻지 못하고 그렇게 쌓여간 분노가 일거에 폭발하고 분출될⁴⁵⁾ 때와 장소를 얻었으니, 그것이 3·1 운동의 만세시위들이었다. 동족 내부의 계급적·신분적 적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4면으로 압박하고 위협해 오는 식민통치기구에 대한 저항이 지방사회 3·1 운동의 기본 동력이 되고 마침내는 폭력적 항쟁도 낳은 것이다.

그 폭력항쟁의 출현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일제 군경의 강경진압 조치 하나로만 귀인 시킬 것이 아니었다. 그것에 대응하는 조건반사적 행동이 시위의 폭력화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지만, 강압통치에 맞서는 집단행동이 만세시위의 형태로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당당히 그 행동대오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자긍심과 의기 고양이 그렇게 만들어간 측면도 컸다.⁴⁶⁾ 익숙한 행동반경을 넘어서고 행동방식에 대한 선택지의 제약도 스스로들 같이 풀어버리는 속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과도 맛보게 되었고, 누적되어 온 분노와 적개심을 그런 감정적 환희와 걱정 속에서 행동으로 풀어낼 태세로 들어서고들 있던 것이다. 그로부터 민중은 눈앞의 폭압 상징과 그 하수인들을 한 번이라도 본때 있게 응징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와 더불어 농민층 중심의 폭력시위는 이심전심으로 공유되고 있던 집합적 열망이 어떤 계기를 맞으니 포효하듯 외화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원곡·양성의 경우에서처럼 그 열망이란 일본인들이 강점지배하면서 폭력으로 유린해온 자기 삶터를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들 손으로 해방시켜 전래의 민족적 삶의 양식과 자치적 삶의 질서를 회복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족통치가 가해오는 압제로부터 해방될의 열망, 그 해방을 위해 억압의 질서를 깨부셔야겠다는 의지와 직접행동의 선택이 지방 3·1 운동의 양상을 점점 더 격렬한 것으로 만들어갔다고 볼 수

45) 안 그래도 '쌀 소동' 성격의 집단행동이 1917년 8월 전남 영광, 동년 11월 강원도 이천·평강, 동년 8월 서울 종로와 부산에서 돌발했고, 관권의 횡포에 항의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도 1918년 3월 강원도 철원과 전북 남원, 동년 5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하여(이정은, 『3·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국학자료원, 2009), 123-128쪽), 민중의 마음과 동향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의 징후가 되고 있었다.

46) 일찍이 뒤르켐(E. Durkheim)이 말했듯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흥분제가 된다. 모이고 나면 개인들을 열광시키는 전류가 생겨난다. 표현되는 모든 감정은 각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증폭되어 마침내 참가자 전체가 '창조적 열광의 시간'으로 들어서게끔 한다(김종업, 『연대와 열광: 에밀 뒤르켐의 현대성 비판 연구』(창비, 1998), 300쪽 참조).

있다. 강제해산시키고 진압하려는 경찰폭력에 무저항으로 그냥 물러서질 않고 대항폭력으로 과감히 맞섰음도 그런 의지가 강렬해졌기에 가능했을 터이다.

게다가 그때의 한국 민중 특히 농·산촌지대 주민들의 뇌리와 마음속에는 과거 60년래, 짧게는 20여 년 전 이래의 수차례 민중운동(임술 농민항쟁, 동학농민전쟁, 영학당(英學黨)·활빈당(活貧黨) 운동, 의병투쟁 등)의 전설과 기억이 어떤 정도로든 들어앉아 있었을 공산이 크다. 서북지방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초기부터 폭력항쟁에 앞장선 이들은 자료에서 보면 주로 천도교인들이었는데,⁴⁷⁾ 천도교 남양교구(南陽教區)의 교리강습소 책임자이면서 수원군 장안·우정면의 공격적 폭력시위를 주도한 백낙열(白樂烈)이 동학농민전쟁에 참전한 바 있었음과 마찬가지로 그들 중에도 동학농민전쟁의 아들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역사적 기억 속에서⁴⁸⁾ 새로운 계기가 오니 또다시 쫓겨난 민중집단에게 질서 있는 평화적 시위란 외려 낯설고 어색한 것일 터였다.⁴⁹⁾ 실은 참가강제라든지 장시집회, 햇불행진, 산호(山呼)와 봉화시위 그 모두가 전래의 민중운동적 방법이 되살려진 것이었다.⁵⁰⁾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환기된 투쟁전술이 의도적으로 다시 채택된 것이다.

민중의 역사적 기억은 싸움법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차원에서도 작동했다. 동학을 위시한 여러 민중종교·신앙을 관류하며 전승되어 온 '후천개벽'의 소망과 사회적 상상이⁵¹⁾ 되살아나 새 힘이 되어주고, 새 세상에 대한 열망과 그리로 나아가려는 욕동(欲動)을 온몸에 실어 내보내게끔 했다.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은 조선조 말 이래의 혁세(革世)

47) 『독립운동사』 2, 354-355쪽 참조. 통계수치를 동원한 자세한 설명은 이정은, 『3·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84-86쪽을 볼 것.

48) 서북지방의 초기 시위운동에서 가장 격렬한 양상을 보인 상원·성천·양덕은 의병장 蔡應彦이 1915년 피체될 때까지 그의 의병부대가 일본군과 계속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이윤상, 「평안도 지방의 3·1 운동」,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260쪽). 趙東杰, 「말기 의병전쟁과 3·1 운동의 관계」, 『대한제국의 의병전쟁』(역사공간, 2010), 275-281쪽에서도 의병전쟁과 3·1 운동의 인적 연결 및 사상·방략 면의 연관성이 여러모로 짚어져 논의된 바 있다.

49) 이 점은 千寬宇, 「民衆運動으로 본 3·1 運動」, 尹炳奭·愼鏞廈·安秉直 編, 『韓國近代史論』 II, 121쪽에서 언급된 바 있다.

50) 趙景達 著, 정다운 역, 『식민지기 조선의 지식인과 민중: 식민지 근대성론 비판』(선인, 2012), 42쪽.

51) 이에 대해서는 김영범, 「19세기 민의 사회적 상상과 鄭鑑錄」, 『민중의 귀환, 기억의 호출』(한국학술정보, 2010)을 볼 것.

열망이 다시금 민중을 사로잡아 신생의 꿈을 품어보게끔 한 사건이었다. ‘독립만세’의 절규는 마음 깊이 쟁여있던 유토피아적 소망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집합적 발성으로서, ‘민중해방 만세’와 같은 소리, 같은 의미였다.⁵²⁾

그래서였을까. 민중의 거듭되는 만세 외침과 시위는 그로써 나라의 독립을 달라거나 이제부터 독립을 이루어내자고 기약함과는 좀 다른 의미로 발해진 면도 있었다. 독립선언을 했으니 이제 곧 독립이 될 거라는 믿음에서, 또는 이미 독립이 되었다는 환각 속에서도 행해지는 경축의례 즉 축제의 성질도 자못 띠어 내보인 것이다.⁵³⁾

그럴 때의 시위는 어떤 유의 비장함보다 흥겨운 도취로⁵⁴⁾ 진행되는 듯했고, 농악과 나발과 징을 앞세운 시위 대오는 점점 규모를 키워가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경찰과 마주쳐도 위축됨이 없었다. 오히려 큰 소리로 꾸짖어 물러갈 것을 요구하고, 그들의 소굴을 공격하여 쫓아내고 처부수려 했다. 남녀노소 가림 없이 한데 어우러져 시위대오가 만들어진 상황에 폭력이 꼭 개재할 바는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제 군경이 가해오는 현실적 폭력과 마주쳤을 때, 그 억압자의 형상이 두 눈 가득 들어왔을 때, 그것은 군중의 눌러있던 분노에 점화제가 되어 거대한 화염을 날게끔 했다. 그렇게 민중의 감정과 외침과 행동은 바로바로 연결되고 일치해갔다.

그리하여 지방 3·1 운동에서 발양된 폭력시위나 공격적 행동들은 민중의 응축된 정념과 의지를 매섭게 뿜어내는 분화구 같은 것이 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기의 농촌지역에 미만했던 ‘대공포’가 귀족을 향한 농민폭력으로 외화 했다면, 3·1 운동에서는 농촌지역의 ‘혁명적 군중’을 일으켜 세운 집합적 열망이 거대 민중폭력으로 분출된 것이다.⁵⁵⁾ 현대도

52) 이에 관해서는 권보드래, 「만세’의 유토피아: 3·1 운동에 있어 복국(復國)과 신세계」, 『한국학연구』(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8집(2015)에서 상설된 바 있다.

53) 축제성을 폭동성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의 중요한 특성으로 발견·포착해낸 이는 제일 연구자 趙景達이다. 그런 시각에서의 설명이 조정달 저, 허영란 역,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근대민중운동사』(역사비평사, 2009), 238-242쪽에 개진되어 있다.

54) 다음의 진술이 한 증례가 될 것이다. “過客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금번 파리평화회의에 의해 조선독립이 승인되었다는 것인즉 그 기쁨은 산보다도 바다보다도 크고 벽차 종일 축배를 들고 취흥이 도도하여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조선독립만세를 두어 번 외쳤던 바…….”(『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1972), 604쪽).

55) ‘혁명적 군중’의 생성 기반과 그의 망팔리테에 대해서는 조르주 르페브르 저, 김기실 역, 『혁명적 군중』(한그루, 1983)을 볼 것.

그런 와중에 상점 절도 같은 것이 없었고, 관공서에서 탈취한 물품은 모두 파기 혹은 소각했지 개인영득이 없었음이 특기할 만했다. 시위군중의 행동 속에 그들만의 논리와 자기규율이 그렇게 일양으로 작동했다고⁵⁶⁾ 보아야 할 것이었다.

이렇듯 3·1 운동기의 지방 만세시위는 민중운동의 전통에 기반을 둔 장엄한 폭동이고, 민중의 무자각적 자율성으로 받쳐지는 열정적 축제이기도 했다. 이때의 '폭동'이란 질서교란의 난폭한 행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분노⁵⁷⁾ 속에서 키워지며 형체를 갖춰간 순정폭력이 현재화한 움직임이라는 의미에서 쓰일 용어이다. 그 싸움은 총격 경찰에 맨손의 돌팔매로 혹은 고작해야 농기구를 갖고 용감하게 맞서는 수준의 원초적 저항폭력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주민 혼연일체의 고양된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사뭇 공격적인 성향의 대항폭력도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IV. 3·1 운동 이후 폭력항쟁 노선의 재발견과 정립

지방마다 역내 통치기관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치닫던 시위운동의 기세는 4월 14일을 고비로 급격히 꺾이더니 일일 시위회수도 급감하여 4월 말에는 거의 종식되었다. 일본군 보병 6개 대대와 헌병보조원 약 400명이 증파되어 대한해협을 건너온 후 4월 14일 부대 배치가 완료되었음과 연관됨이 클 것이다. 3월 말-4월 초의 격렬한 항쟁이 있던 후부터 수원·안성 일대에서 대대적 가택수색 및 체포와 주민참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파된 때문이기도 하겠다. 각지 시위 주동자의 다수 피검 또는 은산·도파·탈출로 지도인력이 거의 고갈되어간 것도 한 요인이었다.

어찌 보면 그 퇴세는 그야말로 맨손과 그 손에 쥐어진 원시적 도구에만 의지한 민중적 폭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민중대표가 당부했던 비폭력 원칙과 행동지침이 결과적으로는 옳은 것이었다고

56) 趙景達 지, 허영란 역,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근대민중운동사』, 241쪽 참조.

57) 이유키가 명확하고 정당한 분노(indignation)는 이유 불명/불문의 증오(hate)와는 다른 것이다.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3·1 운동이 일제 수뇌부에 준 충격과 후속 독립운동에 미친 여파, 그리고 집단심리적 및 정치적 효과와 사상적 영향까지 두루 상고(詳考)해본다면⁵⁸⁾ 그렇게만 말할 수 없게 된다. 이제 그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3·1 운동이 종식되고 반년쯤 지나서부터 독립운동 진영이 폭력노선과 그 방략에 의탁하는 정도가 눈에 띄게 커져갔다. 가장 두드러진 변모는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여준 것이었다. 수립되고 초기부터 외교론 방책과 평화적 노선에 의지하여 독립 성취를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제적 성과가 나올 전망이 거의 없음을 자각케 되자 정부 요인들은 기대와 환상을 버리고 현실로 돌아와 독립운동의 새 방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19년 8월 21일에 임시정부의 기관지 격으로 창간된 《독립(獨立)》의 제2호 지면에서부터 국내 시위대와 손병희를 위시한 3·1 운동 피검자들이 다같이 ‘독립군’으로 호칭된 것도⁵⁹⁾ 그 조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만세시위의 실상과 그 성격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과 아울러, 군사노선으로 독립운동 기조의 전환 또는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절감되기 시작했음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동휘(李東輝) 외 노령(露嶺)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 세력의 합류로 9월에 ‘통합정부’가 되고 나서 임시정부는 전투적 운동노선을 확정짓고 실행에 역점을 두어갔다. 1920년 벽두에 임시정부가 그 해를 ‘독립전쟁의 제1년’으로 선포한 것은⁶⁰⁾ 그런 연관에서였다.

58) 이 점에 관하여 일찍이 소렐(G. Sorel)은 다음과 같이 갈파하였다: “폭력의 효과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눈앞의 결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장기적 영향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폭력이 현재의 노동자들에게 능숙한 외교술보다 더 많은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서는 안 되며,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와 맺는 관계 속에 폭력이 도입된 결과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 우리는 현재의 폭력이 장래의 사회혁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조르주 소렐 저, 이용재 역, 『폭력에 대한 성찰』(나남, 2008), 82쪽)

59) 「獨立軍 消息」과 「本國消息—我獨立軍 審判」, 《獨立》 제2호, 1919년 8월 21일자; 「獨立軍頭領의 公判」, 제4호, 1919년 9월 2일자; 「京城運動의 後報」, 제5호, 1919년 9월 4일자; 「各地方 蹶起」, 제7호, 1919년 9월 9일자 등 참조.
《獨立》은 그 해 10월 25일자의 제22호부터 《獨立新聞》으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60) 「國務院 布告 第1호」, 1920년 1월 13일,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정부수반), 2006, 161쪽 참조.

앞서 1920년 1월 1일 상하이의 모 극장에서 열린 임시정부 신년축하회에서 安昌浩가 〈신년은 전쟁의 해이오〉라는 제목의(「戰爭의 年」, 《獨立新聞》 1920년 1월 17일자) 축사를 하며 “당년의 대문제는 우리 독립운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하라든 방침을 고쳐 전쟁하라 함이오”라고 언명했다(「우리 國民이 斷定코 實行할 6大事 (1)」, 《獨立新聞》.

1920년 4월경에 확정된 14개 항의 〈시정방침(施政方針)〉에서 임시정부는 국내 국민을 향하여 일상 수준에서의 대일 불복종·항거의 방법들을 제시함과 더불어, 독립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감사대(敢死隊) 편성에 의한 작탄투쟁(炸彈鬭爭)을 벌이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미 1월에 정부 직속의 대한민국의용단(大韓民國義勇團)을 창설하여 그 예하의 탐정대 및 모험대가 작탄투쟁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獨立新聞』이 2월 7일자에 7가살(可殺)론을 실어, 독립성취에 방해되는 존재들을 가차 없이 제거해야 함을 역설하고 응징과 정화(淨化)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방침은 재중·재만 독립운동 단체들과 국내 민간사회 양쪽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보조를 같이하는 움직임이 활성화해 갔다. 이미 1919년 늦가을 무렵부터였는데, 그 후로 서간도 방면의 대한독립단·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신흥학우단(新興學友團)·대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 등 여러 단체와 별동조직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편의대(便衣隊)를 국내로 잠입시켜 농촌계릴라성 활동을 벌이고 조직거점도 확보해놓게끔 했다.⁶¹⁾ 편의대는 주로 서북지방의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를 타격하고 군수·면장 등의 관공리와 순사·밀정·친일부호 등의 부일배(附日輩)를 처단한 후 만주 본영으로 귀환하였다. 3·1 운동 때의 계획적 폭력시위에서 전형화한 행동양식을 거의 빼닮은 것이었다. 국내 거점조직을 구축해놓고 비밀리에 활동해간 유명 사례가 1920년 4월경부터 평남 맹산·덕천(德川)·영원 3개 연접 군에 각각 조직된 대한독립단 국내지단들이었고 1921년 5월의 ‘호굴독립단(虎窟獨立團)’ 사건으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1919년 9월에 총독 암살을 기도한姜우규(姜宇奎)의 투탄거사가 서울역전에서 감행되었고, 그것을 신호로 삼은 양 항일비밀결사체들이 국내에서 속속 자생하였다. 주로 서북지방 일대에서 현주민의 주도와 참여로 결성된 이들 조직은 단출한 무장으로나마 군자금 징모 등의 활동을 펴가다 때를 보아 악질순사·친일부호 응징, 면사무소·경찰관주재소 습격 파괴 등의 행동에도 나섰다. 예거해보면, 한민회(韓民會, 1919년 10월 평양에서 결성), 숭의단(崇義團, 1919년 11월 평남 성천), 천마산대(天

1920년 1월 8일자).

61) 이 부분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영범, 『의열투쟁 1: 1920년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46-49쪽을 참조.

摩山隊, 1919년 12월 평북 의주(義州)), 대조선청년결사대(1920년 3월 의주), 대조선독립보합단(大朝鮮獨立普合團, 1920년 5월 의주), 대한민족자결국민회(1920년 5월 평북 구성(龜城)), 국민회(1920년 5월 평남 진남포), 암살단(1920년 5월 서울), 독립청년단(1920년 6월 황해 사리원(沙里院)), 권총단(1920년 여름 황해 재령(載寧)), 농민당(1920년 8월 평남 강동(江東)), 무장계획단(1920년 11월 서울) 등이었다.⁶²⁾

3·1 운동 때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대중적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 없히기도 하면서 상시 내연 상태였다. 그러다 어떤 계기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솟구쳐 나왔으니, 그 징표의 하나가 지역사회에서 돌발하는 주민 집합행동이었다. 1920년 9월 경남 밀양(密陽)에서 벌어진 경찰서 습격사건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일본인 순사부장이 사소한 이유로 한인 순사를 구타했음을 알고 분개한 주민 수백 명이 경찰서로 쳐들어가 사무실 집기와 유리창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깨버리며 매섭게 항의한 것이다. 1년 반 전의 3·13 밀양읍내 만세시위 현장에서 진압헌병에 주민들이 무수히 구타당하며 수십 명의 피검자를 냈던 때와는 판이한 양상이고, 내심 베풀던 보복처럼도 보였다. 당황한 서장이 현장진압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한인 순사와 일본인 순사 간에 격투가 벌어졌고, 결국은 서장 휴직에 순사 10명 징계면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⁶³⁾ 그리고 그 두 달 후에 신입 의열단원(義烈團員) 최수봉(崔壽鳳)의 밀양경찰서 진입 투탄의거가 감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의열단은 황상규(黃尙奎)·김원봉(金元鳳) 등 밀양 출신 청년지사들의 기획과 주도적 참여로 1919년 11월 만주 지린에서 창립되었다.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함에 “신명(身命)을 희생하기로” 한다는 단원들의 공약과 기백은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자”던 지린 발(發) 「대한독립선언서」의 호소와 독려에 그대로 조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맹렬’은 더 이상 맨손·맨몸의 ‘육탄’으로가 아니었다.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폭탄과 권총으로 ‘무장’해서였다.⁶⁴⁾ 그렇게 그들은 의열적 폭력투쟁의 권역으로 진입하여 그 중심에

62) 이 비밀결사들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위의 책(2009), 73-90쪽을 참조.

63) 「數百의 群衆, 密陽警察署를 襲撃」, 《每日申報》, 1920년 9월 17일자(慶尙南道警察部, 『高等警察關係摘錄』(1936), 28-29쪽).

64) 1921년 6월, 의열단의 ‘밀양폭탄사건’(제1차 국내기관 총공격계획)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부단장 객제기는 폭탄거사계획의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

서게 되어갔다.

의열단은 그 폭력을 ‘조선의 독립’만 아니라 ‘세계의 평등’을 위해서도 쓰겠노라 했다. 약육강식에 의한 기득권이 여전히 당연시로 고수되고 있는 국제질서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제는 세계대전의 승진국임을 과시하는 제국주의 강국들이 저질러온 온갖 죄악이 미사여구로 치장만 되는 그 질서를 타파하여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 평등이 기해져야만 한다는 내심의 결의에서였다.

의열단은 일제의 조선지배가 이웃나라와의 신의를 짓밟고 무도하게 자행된 침략강점의 결과이니 ‘강도정치’일 뿐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로부터 ‘천하의 정의로운 일’의 의미가 자명해지는 것이니, ‘강도 일본’을 응징하고 모조리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거역하고 짓밟은 일제와 그 주구들을 향한 폭력,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평등과 인류평화를 기성(期成)하는 폭력! 이것이 의열단을 건립한 취지였고 그 실천은 ‘암살과 괴운동’으로 구체화해갔다.

V. 혁명적 폭력을 향하여

1. 신채호의 ‘혁명적 민중폭력’의 상상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 등의 일제 기관을 표적으로 기도·실행되었고 성공도 본 수차의 폭탄거사로 의열단의 폭력노선은 기세를 떨쳤는데, 그것이 노상 지지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1922년 3월의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육군대장 암살기도 거사 때 빚어진 불상사를 기회로 한 비난도 받았다. 그것을 받아치고 잠재울 요량인 듯, 의열단은 신채호(申采浩)가 집필해준 〈조선혁명선언〉(이하 ‘〈선언〉’)을 1923년 1월에 발표했다.

〈선언〉에 의하면,⁶⁵⁾ 제반 사실과 지나온 일들에 비추어 일본은 ‘제국’이

다. “제작년[1919년] 3월 이래로 조국독립을 입과 붓으로는 구할 대로 구하고 원할 대로 원하였으나 피로써 구한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혈전을 벌이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군함도 대포도 없이 오직 폭발탄과 육혈포밖에 구할 것이 없었노라.”(「密陽爆彈事件 郭在驥 等の 公判」, 《東亞日報》, 1921년 6월 8일자, [] 안은 인용자)

65) 이하의 인용과 내용 재구성은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라는 이름을 침략주의의 간판으로 삼는 강도국가에 불과하다. 그의 '강도정치'가 조선민족을 노예 이하의 '영세우마(永世牛馬)'로, 서·북간도와 시베리아를 떠도는 '아귀(餓鬼)·유귀(流鬼)'로, 또한 '종신불구(終身不具)의 폐질자'로 만들어왔다. '강도 일본'은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맨들려" 하니, 요즘말로는 국가테러리즘의 본산이었다. 그 모든 의미에서 강도 일본은 '조선민족 생존의 적'이므로, 민족생존을 유지하려면 '살벌(殺伐)'해야만 한다. 최소한 '구축(驅逐)'이라도 해야 한다. 일제와의 공존을 바라고 타협하며 한갓되어 내정독립·참정권 혹은 자치를 구걸하거나 '문화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기생하려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살벌 또는 구축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혁명으로일 뿐이다. 어떤 식의 혁명인가? 신채호는 그것이 민중직접혁명이면서 폭력혁명이어야 한다고 명쾌히 답했다. 민중과 폭력이 결합해야만 하고, 그래서 거대한 민중폭동이 불붙을 때 조선혁명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언>에서 신채호가 "3·1 운동의 만세소리에 민중적 일치의 의기(意氣)가 별현(瞥現)하였지만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갖이지 못하였도다"고 굳이 비판한 것도⁶⁶⁾ 위와 같은 논리 구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서 1921년 초에 신채호는 잡지 <천고(天鼓)>에 실은 글에서, "우리는 평화행복을 기구하는 바이지만, 강적 제거와 동양의 평안 도모는 '유혈'

제8권: 독립운동(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891-901쪽의 원문에 의거한다.

66) 위의 책(2008), 898쪽. 신채호가 3·1 운동을 직접 언급한 글은 극소해 보인다. 『전집』 8권을 통틀어 봐도 3개뿐이다. 여기 본문에 인용된 <선언>의 한 문장, 그가 주재했던 잡지 <天鼓> 제1권 제1호(1921년 1월간) 「창간사」 속의 "(우리가) 人義를 성취하여 후세에 보이도록 한 것은 己未 독립운동의 전후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구절(『단체 신채호 전집』 제5권: 신문·잡지, 306쪽), 그리고 <天鼓> 제1권 제3호, 1921년 3월 1일자에 실린 「第三回 三一節 普告同胞」(같은 책, 484-489쪽)가 그것이다. 후자의 글에서도 "맨손으로 전쟁을 개시"했으며 "5천년 이래의 제일 큰 사건"이 된 3·1 운동의 의의와 그 영향을 다소 평이하게 서술하고 그에 따른 각오를 피력했을 뿐, 3·1 운동의 실상을 묘사했거나 평실한 것은 없다. 3·1 운동기에 폭력시위가 적지 아니 빈발했음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선언>의 논조로 보더라도 그렇게 소홀히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니, 상세한 인지의 개연성은 거의 없었다고 봄이 옳을 것 같다. 오히려 그와 반대의 정황이었다는—그리 된 이유를 그는 "3·1 운동에 일반인사의 '평화회의·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돌리어 2천만 민중의 奮勇前進의 의기를 打消하는 매개가 될 뿐이었도다"고 <선언>에 썼다— 무지 혹은 전면적 오인으로부터 신채호의 '민중적 폭력론'이 더 강하게 개진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채호 사상과 3·1 운동의 가교 역할을 해준 것이 의열단의 존재와 그 활동이었던 것이다.

두 글자를 떠나서는 이뤄낼 수가 없다…… 적과 혈전을 벌일 것을 마음 깊이 새기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하여,⁶⁷⁾ 혈전을 통해서만 일제타도와 동양평화의 길트기가 가능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때는 신채호가 ‘군사통일’ 사업에 매진 중이었으니 ‘혈전’의 뜻은 독립군 무장투쟁이었을 테다. 그렇지만 신채호가 그것에 걸었던 희망과 혁명러시아의 지원에 대한 기대는 얼마 안가 1921년 6월의 흑하사변(黑河事變)으로 인하여 무참히 깨지고 거둬들여졌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이겠는가. 조선민족 자기와 그 자신의 힘뿐이다. 민족의 큰 숙원을 이뤄내려면 자기 스스로, 오직 자력(自力)으로가 아니면 안 될 것이었다. 그런데 그 ‘자력’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민중적 폭력 말고는 더 없다고 신채호는 보았으며, 준비니 뭐니 하며 오래 기다릴 나위도 없었다. 독립운동 진영 내부에서 그동안 일제 구축의 방법론으로 채택되었고 실천도 되어 오던 외교론과 독립전쟁 준비론을 2천만 민중의 의기를 눌러 없애는 데나 기여하는 ‘일장(一場)의 잡꼬대’요 ‘미몽(迷夢)’일 뿐이라고 질타하여 배척함과 아울러 “양병(養兵) 십만이 일척(一擲)의 작탄(炸彈)만 못하며 억천장(億千張) 신문·잡지가 1회 폭동만 못할지니라.”라고 그가 단언한 것은 그래서였다. 총봉기로써 일제 구축을 피하는 민중의 폭동을 상상하며 그것을 중심적 의미항으로 삼는 ‘혁명적 폭력’론이 이렇게 버리어져 창도되어 갔다.

그런데 민중의 폭력혁명은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촉발제가 있어야 한다. 선구적 폭력 같은 것이다. 의열단이 줄곧 벌여온 암살·파괴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신채호는 정곡을 찔러 말하며 심중한 의미부여도 해주었다. 하지만 파괴가 혁명적이려면 그 대상을 일제 기관이나 시설물로 국한할 것이 아니다. 식민제도 전반으로, 체제 자체로 넓혀 잡고 그 심장을 노려야 한다. 그 점을 신채호는 다섯 가지의 파괴 대상을 제시함에 의해 교시해주기도 하였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도 신채호의 혁명론은 폭력론 이상으로 나아갔다. ‘이상적 조선’의 건설이 ‘조선혁명’의 최종목표였다. 그의 혁명론의 진수는 실상 이것이었으니, 이민족의 전제통치, 총독 이하 강도단의 특권계급, 강도의 살을 찌우는 경제약탈제도, 강/약과 천/귀로 민중을

67) 震公, 「韓漢兩族之宜加親結」, 《天鼓》 제2권[제1권]의 오기였던 듯함 제2호, 1921년 2월 1일자(『단체 신채호 전집』 제5권: 신문·잡지, 116쪽).

갈라놓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강자만을 옹호하는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하고, 고유적 조선, 자유적 조선민중, 민중적 경제, 민중적 사회, 민중적 문화의 '신조선'을 건설하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채호 자신이 박은식·조소앙(趙素昂) 등과 더불어 재발견해오고 있던 중인 유교적 대동사상, 그리고 문헌열독 및 교류를 통해 접속 중이던 아나키즘을 버무려 주조했을 것인 총체적 유토피아 상이었다.

이처럼 신채호가 구상한 조선혁명의 의미는 다층적이었다. 그러면서 민족혁명을 넘어서고 계급철폐만으로 멈추지 않을 세계혁명의 첫걸음도 될 것이었다. 동서양 인류 속의 개개인 모두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해방, 인간혁명이 신채호의 최종적 이상이고 새로운 '꿈하늘'이었다.⁶⁸⁾ 오직 하늘만이 행할 수 있을 벽력같은 파괴와 창신을 상상했기에 '꿈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 테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혁명적 폭력은 그 무렵 1921년에 멀리 독일에서 벤야민(W. Benjamin)이 독창적 사고로 주조해내고 있던 '신적 폭력' 개념을⁶⁹⁾ 방불케 한다.

그리하여 일생일대의 개벽개천이 온다면, 그로써 이상적 조선이 건설 될 수 있다면, 그 힘은 민중의 것이면서 제어 불가한 폭력이라고 신채호는 본 것이다. 그 폭력은 서양 '문명' 세계가 조형해낸 근대체제의 구조적 폭력과 '제국' 일본이 그것을 본떠 이웃나라를 늑탈하고 심어놓은 식민주의 체제폭력(systemic violence)에⁷⁰⁾ 맞서 결국은 다 쓸어버릴 유일한 힘이었다.

2. 신채호 사상의 파급과 영향

〈조선혁명선언〉에 담긴 신채호의 웅대한 사상과 단호한 언설은 그 후에도 환상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과 1928년 집필로 추정되는 〈무정부

68) 이 관점은 김영범, 「신채호의 '조선혁명'의 길」(『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18집, 2001)에서 제시된 바 있다. 「꿈하늘」은 1916년 신채호가 망명지 베이징에서 지은 환상소설로, 그때는 사회진화론적(social Darwinist) 욕망에 입각하여 영광의 고대사를 되새기며 한국이 다시 일어나 강국이 되는 꿈을 담아낸 것이었지만, 1923년의 시점에 와서는 꿈의 내용과 구성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69) 이것에 대해서는 뒤의 주 80에서 한꺼번에 말하기로 한다.

70) '체제(의) 폭력'은 지체에게서 빌려오는 용어이다. 슬라보예 지젝 저,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뼈뚫한 성찰』(난장, 2011) 참조.

주의동방연맹(無政府主義東方聯盟) 선언)으로⁷¹⁾ 이어졌고, 그러면서 깊이와 적용범위를 더해갔다.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3·1 운동을 기념할 때면 신채호 사상의 요점에 기대는 언설이 종종 나오곤 했다.

예컨대 1925년 3월 1일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여월한인전체(旅粵韓人全體)’ 명의로 나온 <대한민국독립선언 제6주 기념사>(中文)는 “폭동, 암살, 파괴가 우리의 유일한 전투무기이고, 전민족의 공동혈전이 되도록 분진(奮進)하리니, 최후의 1인 1각까지 벌일 싸움은 위대하고 신성한 자유를 되찾아야만 그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⁷²⁾ 1926년에 반(半)공개적 혁명당으로 조직 체제를 개편한 의열단이 1929년 상하이에서 발표한 <3·1 10주 선언>도 “혁명은 전쟁이요 폭동은 예술이다. 조선민족의 완전한 해방은 오직 조선민족의 피와 땀과 폭발탄과 육혈포와 칼과 창—부절(不絶)의 폭력적 운동—으로써만, 그리고 최후로의 대중적 총폭동으로만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³⁾ 끊임없는 폭력적 혁명운동의 열매일 ‘대중적 총폭동’을 무장투쟁 이상 가는 최후의 민족해방 방법으로 다시금 내세운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39년 3월, 조선의용대 지도위원인 김성숙은 중국항전에 직접 참가함과 전 조선민족의 ‘반일혁명폭동’을 발동시키는 것이 의용대의 임무임을 확인하였다.⁷⁴⁾ 그리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도 1941년의 3·1절 기념 선언과 기관지 논설에서 ‘제2차 3·1 운동’, ‘제2차 대혁명’, ‘제2차 전민혁명’의 발동을 역설하며 국내진공의 대일전쟁과 민중항쟁의 결합을 민족혁명의 최후 방략으로 제시하였다.⁷⁵⁾ 그와 동일 시점에 충청의 한인들이 발표한 <한국 3·1절 22주기념대회 경고중국동포서(敬告中國同胞書)>(中文) 역시 “조직과 계획을 가진 전민족적 혁명적 폭력이 있어야만 일본제국주의 통치를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을 조선민족은 깨달았다”고 하여,⁷⁶⁾ 폭력으로 뒷받침되는 ‘전민혁명’에의 간구를 언표하였다.

71) 두 작품은 각각 『단재 신채호 전집』 제7권(문학)의 5-20쪽과 393-395쪽에 실려 있다.

72) 독립기념관 소장본에 의한. ‘粵’은 廣東 지방에 대한 중국식 별칭.

73)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창작과비평사, 1997), 239쪽 참조.

74) 星淑, <快向敵人的後方邁進>, 『朝鮮義勇隊通訊』 제7기(1939년 3월 21일), 4쪽.

75) 앞의 각주 6의 「三一節第22週年紀念宣言」과 「第二次大戰時應有之認識與努力」, 『光復』 제1권 제4기, 1941년 6월 20일, 7쪽.

76) 독립기념관 소장본에 의한.

신채호가 창도한 ‘혁명적 폭력’ 사상은 그렇게 짙은 여운을 남기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유효성은 갈수록 더 실감되었던 것이다.

VI. 맺음말: 폭력과 평화 사이의 반(反)폭력

이제 번설을 마무리할 지점에 다다랐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이론적 쟁점이 될 수도 있을 부분에 대한 얼마간의 첨언으로 끝맺도록 하겠다.

종교계 인사들 중심의 민족대표에 의해 비폭력 원칙의 준행이 신신당부 되었음에도 3·1 운동의 초기 국면부터 일제의 지방통치기구를 향한 조선민중의 폭력이 터져 나와 급속도로 전국적 현상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되니 그에 맞서는 저항적 폭력이 대중을 이루었다. 하지만 3월 중순을 넘어서고부터는 지역 내 통치기관들을 습격하여 파괴하고 관공리 살해도 불사하는 계획적 폭력투쟁이 중·남부 지방에서 빈발했다. 군사적 무장은 못했지만 농기구 등의 원시적 장비를 동원해 갖추고서였고,⁷⁷⁾ 이미 3월초에도 그랬었다.

그렇듯 3·1 운동에는 평화적 시위와 폭력시위가 처음부터 혼재해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대략 6:4의 비율이었다. 따라서 3·1 운동이 비폭력운동이었다거나 그 기조가 비폭력주의였다는 주장은 반쯤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국내 독립선언서는 정의와 인도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조선독립을 점잖게 요구했지만, 농촌봉기에서는 몸으로 실감되는 억압질서의 전복과 즉각적 해방에의 열망이 폭력적 직접행동으로 표출되곤 하였다.

그러므로 ‘무저항주의’나 ‘무혈혁명’은 그 의미를 오해 또는 변조하지 않는 한에서는 3·1 운동에 적용될 수가 없는 용어이다. ‘폭력화’도 개별시위의 양상 전화를 뜻함과 전국적 시위상황의 주조가 변해갔다는 뜻의 두 경우를 준별해 써야 한다. 후자의 의미에서 ‘비폭력에서 폭력으로’라는 추세를 강조하는 진화론적 도식도 확인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부분적으

77) 이것을 초보적 수준의 ‘무장’이었다고 볼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고 더 논의를 요할 것이나, 표준적 의미의 무장항쟁·무력투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로만 들어맞는다.

3·1 운동은 두 달 만에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민중의 거대한 함성과 폭력항쟁은 커다란 변화를 낳았다. 일제의 통치정책이 ‘문화정치’로 바뀐 것이 그렇거니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도 외교론 일변도에서 독립전쟁 준비와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어갔다. 그 노선변화에 국내 민중이 호응하여, 지역 수준의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어렵게 무기를 구하여 관공서 습격 및 폭과거사를 벌이며 친일협력자를 응징하는 등의 폭력적 항일활동을 펴갔다. 3·1 운동 때 일구어진 새로운 행동양식의 발현이었고, 그때의 방어적 및 공격적 대항폭력의 경험이 낳은 자신감⁷⁸⁾ 덕분이기도 했다.

1920년부터 독자적 기획과 준비에 의해 무장투쟁적 암살과파괴운동을 맹렬히 전개해간 의열단의 폭력은 일제가 문화정치를 내세우고도 지능적으로 계속 가동시키는 강권주의 폭력통치가 종결되도록 그 장치들을 파괴하고 조종자를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발해진 것이었다. 유의할 점은 그것이 테러적 충동이 낳는 무차별적·맹목적 폭력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자기제어적인 폭력이었다는 것이다. 자기희생을 담보하고라도 무고한 타인의 희생—군사용어이지만 일상 관용어도 되어버린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은 없어야 한다는 신조와 원칙이 암살·파괴거사의 극대효과를 매번 노려야만 하는 입장과 상충하여 딜레마를 낳으면서도 시종 지켜졌다.⁷⁹⁾ 그렇듯이 의열적 폭력은 제반 위압적 폭력의 발생경로나 성질과는 많이 다른 것임과 동시에 현실 속의 제도화된 보법폭력(保法暴力)에⁸⁰⁾ 맞섬이기도 하니, ‘반(反)폭력’(anti-violence)⁸¹⁾

78) 파농(F. Fanon)에 따르면, 식민지 원주민에게 있어서 폭력은 열등감과 좌절, 무기력을 없애주고 용기와 자존심을 되찾게끔 해준다(프란츠 파농 저, 남경태 역, 『대지의 지구 받은 사람들』(그린비, 2010), 105쪽). 그런데 파농이 언급한 반식민적 폭력은 보복과 응징의 의미를 띤 파훼와 살해의 직접적·원시적 폭력이고 자기해방적 폭력이자, 체제 자체를 부수고 바꿔놓거나 새로 만들어내려는 혁명적 폭력이지는 않았다.

79) 이에 대해서는 지면 제약으로 상설하지 못하고, 줄고, 『의열투쟁과 테러 및 테러리즘의 의미연관 문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사회와 역사』 제100집(2013)에서의 논의로(특히 192쪽) 대신한다. 그리고 이 점을 1897년부터 1915년까지 독립운동으로서의 반영투쟁을 격렬하게 벌였던 인도 ‘폭력파’나 1970-80년대의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활동 특성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인도 폭력파에 대해서는 조길태, 『인도 민족주의 운동사』(신서원, 1993)의 제5장이 참고 된다.

80) 벤야민의 폭력론(발터 벤야민 저, 최성만 역, 『폭력비판을 위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외)』(길, 2008)을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그는 법을 정립해놓고 그 선포된 대상에 상시 개입하여 통제하는 ‘(그리스)신화적 폭력’과 그 법을 보존하며 전자에 봉사하는

으로의 길을 여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의열적 폭력은 단체 활동인 한에서는 조직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제국의 강고한 성채를 함락시켜야 하는 독립운동전선 전체의 지평에서 보면 역시 개별·분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의거'들의 효과도 냉정히 말하면 일시적·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실정에서 신채호가 한국 민족의 응축된 분노와 소망의 에너지를 다 담아내는 것 같은 거대폭력의 '신화'적⁸²⁾ 상상을 '폭동'이라는 당시의 상용어에 담아내며 제시하였다. 3·1 운동처럼 민중이 직접 나서면서 그 규모와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폭되는 총봉기를 마음에 그려 대망한 것인데, 그것을 그는 '꿈하늘'로 표상되는 '이상적 조선'을 창조해낼 혁명의 비전과 결합시켰다.

신채호는 그렇게 3·1 운동의 함의를 포착하여 거두어들이면서 새 과제의 제시로 나아갔다. 민중의 힘과 그 원초적 폭력성의 재발견이요, 민중이 자신만을 믿고 그 자신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이루어내자는 일대 각오였다. 3·1 운동 때 발현되었던 민중적 폭력을 그 자신은 제대로 다 인지하지를 못했던 듯하나, 여하튼간에 3·1 운동의 민중적 의기는 그 잔여 에너지를 응축시킨 의열적 폭력을 디딤돌로 삼아 일제 식민주의 체제와 그 기동적인 각종의 제도적 폭력을 섬멸하고야 말 혁명적 폭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신채호가 상상하고 자기식의 의미도 부여한 혁명적 폭력이란 결국 현실 속 폭력적 지배의 매트릭스를 완전히 건어내 없애버리려는 '신적' 의지가 민중적 폭력을 몸체로 하여 구현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표출되는

관리형 폭력이 실제함을 논하고, 부정의를 격멸하는 섭리의 성스러운 집행이 될 미래의 '(유대)신적 폭력'을 그것들에 대위시켰다.

테리다(J. Derrida; 자크 테리다 저,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를 따라 국내 논자들이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 둘 다를 신화적 폭력에 포함시키는데, 잘못된 도식이고 오해이다(그리고 필자는 전자를 '창법폭력', 후자는 '보법폭력'으로 역어를 좀 달리해 쓴다). 여기서의 '법'이란 지배의 질서와 그것을 지탱하는 각종 장치의 환유라고 보면 될 것이다. 1920년대 당시로는 일제의 조선강점, '한일병합 조약'을 내세우는 그것의 합법화, '동조동근'론에 의한 정당화는 창법폭력이었고, 총독부 설치 이래의 무단통치와 기만적 문화정치의 장치들, 둘 다가 보법폭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81) 이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주 83에서 후술할 것이다.

82) 소렐은 거대한 사회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임박한 행동을 자신들의 대의가 어김없이 승리할 전투의 이미지로 마음속에 그려볼 때의 그 구성물을 '신화'로 명명하고 생디칼리스트들의 총파업, 마르크스 이론 속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예로 들었다(조르주 소렐 저, 이용재 역, 『폭력에 대한 성찰』, 55쪽).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총파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신화적 역능 그 자체였다.

직접적 폭력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 자체를 해체함에 목표를 두는 폭력, 영구평화를 그냥 염원하거나 되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상에 구현해내려는 결기의 폭력, 그러면서 스스로도 은하계로 사라져가듯 영원 소멸할 운명의 폭력이었다. 그런 여러 의미에서 그 폭력은 ‘구주대전(歐洲大戰)’의 참화 이후로 개조와 평화가 그렇게 고창되는 중에도 여전히 강권식민주의가 서로 결착하여 고수되는 시대에 꿈꾸어진 반폭력이었다고 하겠다.⁸³⁾

신채호는 환상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상제(上帝)의 경호대장 겸 동양총독인 ‘미리’의 대극에, 그와 친형제이면서도 민중 수탈·박삭과 억압·기만을 일삼는 천궁세력을 “0으로 소멸”시켜버릴 반역괴수 ‘드래곤’을 위치시켰다. 그리고 양자는 동생이성(同生異性)인 존재라 하였다.⁸⁴⁾ 이것은 그때 벌써 그가 폭력(즉 미리)과 반폭력(즉 드래곤)의 관계를 통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비상한 은유이다. 그렇다면 1920년대 중엽에 신채호가 급속히 빠져 들어간 ‘무정부주의’도 그에게는 무강권주의로 이해되는 면이 컸고, 결국은 영구평화의 꿈하늘을 열어 보여줄 반폭력의 소망과 기대를 가득 담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83) ‘반폭력’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발리바르(É. Balibar)가 대항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인권의) 정치’를 가능케 해줄 시민다움/명명성(civilité)의 태도 혹은 전략이 된다는 뜻에서 자신의 새 문제를 안으로 도입해 쓰기 시작한 말이다(에티엔 발리바르 저, 윤소영 역, 『반폭력과 ‘인권의 정치’』, 『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의 정치』(문화과학사, 1995)). 나중에 그는 대항폭력이 무장봉기나 테러리즘, 자살폭탄 공격과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귀착되기 쉬워서, 능동적 주체성과 집합적 연대를 형성시키는 장소가 된다는 적극적 의미의 ‘저항의 정치’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대항폭력도 비폭력도 아닌 제3의 길(‘레닌과 간디의 만남’)을 주장했다(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난장, 2012); 진태원, 「극단적 폭력과 시민다움」, 『철학연구』 제118집(2017); 서관모, 「반폭력의 문제설정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1호(2018)).

그러나 필자는 현대 서구가 아닌 식민지 조선에서 현정적 시민권(citoyenneté)에 기반하는 발리바르식 ‘정치’의 가능성과 그 현실화 공간이 (만만치 않게 컸다고 보는 눈자들이 근래 등장하고 있음은 알지만) 과연 얼마나 되었을지 회의적이다. 그래서 정치철학이 아닌 역사적 관점 및 사회학적 견지에서 ‘반폭력’의 의미를 일부 변용시켜 발리바르의 것과는 좀 다르게 쓰고 싶다. 즉, 대항폭력이 복수와 응징의 기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적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 및 그 작동체계의 파괴와 궁극적인 소멸을 꾀하면서 무폭력(aviolence)의 시간대로 항진해갈 때 점차로 띠게 되는 어떤 형상 또는 의미론적 잠재태라는 것이다. 무폭력의 평화로 이르려는 길에 비폭력적(nonviolent) 방식도 있(어 왔)지만—갈통(J. Galtung)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제안(요한 갈통 저, 이재봉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 2000))이 그 모두를 포괄한다—, 그것만을 유일한 것으로 절대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84) 『단재 신채호 전집』 제7권: 문학, 609쪽 참조.

그와 같이 반폭력이 될 혁명적 폭력에 대한 상상과 그 필요성 및 효능에 대한 감각은 그 후로 재중국 독립운동 진영에서 계속 흡수·전파되어갔다. 그렇지만 일제 직접통치 하의 국내에서는 그 상상이 현실화할 만한 정치적 지평이 끝내 열리지 못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의 열풍이 전국을 휘감고 있던 때인 1929년 12월 서울에서의 민중대회 개최 시도로, 혹은 1930년대 초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서 얼마간 가능성이 비쳐보였다고도 하겠지만, 곧 엄혹한 탄압을 받아 멸실되고 말았다. 대신에 중국 관내(關內) 지구에서 1938년과 1940년에 창설된 두 ‘혁명무력’ 즉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이 ‘전민혁명’을 추동하고 준비해갈 새로운 선도자를 자임하였다.

그와 같은 민족혁명 군대의 설립을 고대했거나 거기에 어느 정도론든 관계했던 세력은 3·1 운동을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듯이 그것의 무장봉기·무력투쟁 결여태를 꼭 짊어 지적하곤 했다. 반면에, 그 무장력과 전혀 관계 맺지 못하고 거의 방관자적 태도까지 내보였던 이승만 같은 이는 환국 후에 3·1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정치적으로 전유하려는 속셈인 듯이 ‘순연한 비폭력·비군력 운동’으로 성급히 규정지어버렸다.⁸⁵⁾ 그러는 중에 3·1 운동의 주요 실상 하나가 논외로 빠지거나 아예 외면되고 시야 밖으로 내쳐지기까지 했으니, 그것은 곧 대항적 민중폭력의 발현이었다.

그런 견지에서 돌아볼 때, 3·1 운동은 흔히 말해지듯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독립선언과 평화적 만세시위만으로 독립이 곧 성취될 것을 기대한 민족대표의 턱없는 낙관과 막연한 희망이 큰 오산이었고, 실패라면 실패였을 따름이다. 폭압 일제가 조선민중이 내보인 폭력적 직접행동의 격한 기세에 경악하고 사실상 굴복하여 통치정책을 바꾸게끔 된 것이 3·1 운동의 직접적 성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치’ 역시 일제의 어떤 의도 속의 ‘문치교화’를 꾀하는 기만술책이었다면, 3·1 운동의 더 큰 성과는 따로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립운동 진영의 인식과 사고와 태세를 크게 바꿔놓아 새로운 각오로 정대의 노선으로 나아가게 한 것, 그 이상으로 조선민중 속의 수많은 3·1아(兒/我)들이 나름의 자각과 결의에 의해 의열투쟁의 주체로, 폭력의 담지자로 기거이

85) 이 언설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달리 더 있었다고 보이나 여기서는 언급을 약한다.

나서게끔 한 것, 그것이 3·1 운동의 실질적 성과이고 숨겨진 성공이었다. 민중적 폭력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과 그 발현에의 크나큰 희망, 그리고 조선혁명의 장대한 비전도 그로부터 나왔으니 그러하다. 3·1 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큰 진전이고 혁명운동의 새 출발점이었다면 이런 의미에서도 아니었을까 한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각종의 제도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대항체로 하여 식민주의적 체제폭력이 상시 가동되는 시·공간에서 역사적 필연으로인 듯 나타난 대항폭력이 단순 보복의 테러 또는 증오의 테러리즘으로 전략하지 않고 의열투쟁으로 표출되고 있던 한에서 ‘창조적 파괴’로 나아갈 거대 민중폭력의 선도체로 삼아진 것, 그리고 그 민중폭력은 폭력체제 자체를 소멸시키고 진정평화의 세상을 열어줄 반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채호의 폭력사상과 혁명사상의 중요한 함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갈통의 평화학이 유일의 진로로 제시하고 강조했던 것과는 다른 길일 ‘반폭력에 의한 평화’도 새로이 상상해볼 수 있음과 아울러, 어떤 역사적 국면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가능할지에 대해 진중하게 사유해볼 수 있음도 시사 받는다. 이에 동의하는 한에서 후자의 작업은 만만치 않은 고뇌와 지적 분투를 요하는 이론적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獨立(新聞)》(上海版), 《東亞日報》, 《每日新報》.

《光復》, 《朝鮮義勇隊》, 《朝鮮義勇隊通訊》, 《韓青》.

『中國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慶尙南道警察部, 『高等警察關係摘錄』. 1936.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2. 정음문화사, 1968.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19. 2006·2007.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 3·1 運動篇 其一·其三. 1977·1979.

단체 신재호 전집 편찬위원회 편, 『단체 신재호 전집』 제1-제9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1972.

_____, 『독립운동사』 제2·3권: 3·1 운동사 상·하. 1971.

朴殷植 著, 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윤소영 편역, 『日本新聞 韓國獨立運動記事集』 I·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26. 東京: みすず書房, 1967.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東京: 原書房, 1967.

『大韓獨立宣言書』. 吉林, 1919.

_____. 河東, 1919.

『韓國3·1節22週紀念大會敬告中國同胞書』. 重慶, 1941.

權南善 외 8인, 『同胞에 檄하노라!!』. 忠武, 1919.

旅粵韓人全體, 『大韓民國獨立宣言第六週紀念辭』. 廣州, 1925.

2. 단행본

김영범, 『의열투쟁 I: 1920년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_____,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김정인·이정은, 『국내 3·1 운동 I: 중부·북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중엽, 『연대와 열광: 에밀 뒤르켐의 현대성 비판 연구』. 창비, 1998.

金籟鳳, 『3·1 運動史 研究』. 국학자료원, 2000.

슬라보예 지젝 著,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뼈막한 성찰』. 난장, 2011.

慎鏞廈, 『3·1 運動과 獨立運動의 社會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난장, 2012.

요한 갈통 저, 이재봉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尹炳奭·愼鏞廈·安秉直 편, 『韓國近代史論』 II. 지식산업사, 1977.

이정은, 『3·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자크 데리다 저,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趙景達 저, 정다운 역, 『식민지기 조선의 지식인과 민중: 식민지 근대성론 비판』.
 선인, 2012.

趙景達 저, 허영란 역,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근대민중운동사』. 역사비평사, 2009.

조길태, 『인도 민족주의 운동사』. 신서원, 1993.

조르주 르페브르 저, 김기실 역, 『혁명적 군중』. 한그루, 1983.

조르주 소렐 저, 이용재 역, 『폭력에 대한 성찰』. 나남, 2008.

최준채 외 4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7.

프란츠 파농 저,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10.

프레드릭 A. 매켄지 저, 신복룡 역주, 『한국의 독립운동』. 집문당, 1999.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3. 논문

강만길, 「독립운동의 폭력노선과 비폭력노선」. 『외국문학』 제11호, 1986, 101-115쪽.

권보드래, 「만세의 유토피아: 3·1 운동에 있어 복국(復國)과 신세계」. 『한국학연구』(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38집, 2015, 193-226쪽.

김영범, 「19세기 민의 사회적 상상과 鄭鑑錄」. 『민중의 귀환, 기억의 호출』, 한국학술정보, 2010, 64-94쪽.

_____, 「신채호의 ‘조선혁명’의 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8집, 2001, 39-67쪽.

_____, 「의열투쟁과 테러 및 테러리즘의 의미연관 문제」. 『사회와 역사』 제100집, 2013, 167-201쪽.

김현, 「폭력 그리고 진리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제2호, 2014, 5-41쪽.

朴成壽, 「3·1 運動에서의 暴力과 非暴力」. 尹炳奭·愼鏞廈·安秉直 編, 『韓國近代史論』 II. 지식산업사, 1977, 123-139쪽.

박종린,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운동 인식」. 『서울과 역사』 제99호, 2018, 127-151쪽.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폭력비판을 위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외)』, 길, 2008, 77-117쪽.

서관모, 「반폭력의 문제설정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1호, 2018, 14-46쪽.

신용하, 「3·1 독립운동의 쟁점」.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 121-141쪽.
- _____, 「3·1 獨立運動 勃發의 經緯」. 尹炳奭·愼鏞廈·安秉直 編, 『韓國近代史論』 II, 지식산업사, 1977, 39-112쪽.
- 이운상, 「평안도 지방의 3·1 운동」.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258-305쪽.
- 이운상·이지원·정연태, 「3·1 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229-257쪽.
- 이정은, 「안성군 원곡·양성의 3·1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1987, 151-178쪽.
- _____, 「창녕군 영산의 3·1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139-166쪽.
- 이종민, 「1910년대 경성 주민들의 ‘죄’와 ‘벌’: 경범죄 통계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7권 1호, 2001, 95-130쪽.
- 이지원, 「경기도 지방의 3·1 운동」.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306-347쪽.
- 정연태, 「경남 지방의 3·1 운동」.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348-393쪽.
- 趙東杰, 「말기 의병전쟁과 3·1 운동의 관계」. 『대한제국의 의병전쟁』, 역사공간, 2010, 265-281쪽.
- 진태원, 「극단적 폭력과 시민다움」. 『철학연구』 제118집, 2017, 79-109쪽.
- 千寬宇, 「民衆運動으로 본 3·1 運動」. 尹炳奭·愼鏞廈·安秉直 編, 『韓國近代史論』 II, 청년사, 1989, 113-122쪽.
- 홍중욱, 「북한 역사학의 3·1 운동 인식」. 『서울과 역사』 제99호, 2018, 153-203쪽.
- 原口由夫, 「三·一運動彈壓事例の研究: 警務局日次報告の批判的檢討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제23집, 1986, 215-243쪽.

국 문 초 록

무저항주의 기조의 ‘순연한 비폭력운동’이었다는 오랜 통념과 달리, 또는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전화했다는 근래의 대체설과도 달리, 3·1 운동은 처음부터 평화적 시위와 폭력시위의 두 얼굴을 내보였음을 이 글은 밝혀내 강조한다. 원시적 도구에 의존하여 농민층이 앞장선 유혈적 폭력행동은 즉응적·저항적인 것에서 계획적·공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고, 그러한 민중적 폭력항쟁이 결과적으로 일제의 통치정책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지도노선도 급전하게끔 만들었다. 그 전환에 국내 민중이 폭력적 항일활동의 재개로 곧장 호응했고, 의열단은 암살과괴운동으로 일제 폭력통치의 종결을 도모하였다. 이에 영감을 얻어 신채호는 3·1 운동에서 시험된 민중적 의기와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다고 본 폭력의 결합에 의한 일제 타도의 총봉기를 규호하고, 그것이 건설해낼 ‘이상적 조선’의 상도 제시했다. 그와 같은 혁명사상이 재중국 독립운동 진영에서 계속 흡수·전파되어 간 끝에 혁명무력들이 설립되고 ‘전민혁명’을 추동하였다. 결국 이러한 전 과정은 3·1 운동에서의 민중적 폭력이 의열적 대항폭력의 필터를 거쳐 혁명적 폭력의 사상적 모태요 발원지로 되었음과도 같다. 또한 혁명적 폭력은 식민주의적 체제폭력을 섬멸하여 동양평화의 초석을 놓아줌과 동시에 스스로 소멸해갈 것으로 상정된 점에서 이념형적 ‘반폭력’의 새로운 의미자원으로 삼아질 수 있다.

투고일 2018. 9. 27.

심사일 2018. 10. 19.

게재 확정일 2018. 11. 20.

주제어(keyword) 3·1 운동(March 1st Movement), 혁명적 폭력(revolutionary violence), 민중적 폭력(grassroots violence), 반폭력(Anti-violence), 신채호(申采浩, Shin Chae-ho), 의열단(義烈團, Euiyoldan)

Abstracts

Violence in the March 1st Movement and its Implications:
The Imaginary of 'Revolutionary Violence' as Anti-violence
Kim, Yeong-beom

This paper clarifies and argues that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in colonial Korea showed a violent face from the very beginning besides peaceful one which has been the conventional notion of that movement for a long time. At the same time, it criticizes and opposes recent claims that the movement evolved from a nonviolent to violent one. Violent and bloody demonstrations staged by the Korean peasantry, who took the frontline of the movement armed with primitive instruments, eventually transformed themselves from instant and resistant to planned and aggressive ones. This resulted in bringing about a rapid change not only in the Japanese imperialist policy but also in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led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In response, grassroots people in Korea promptly acted in concert by taking up anti-Japanese violent activities. Also, the secret society Euiyoldan executed the assassination-and-destruction movement with the aim of terminating the Japanese violent rule. Inspired by these moves, Shin Chae-ho implored a general uprising to overthrow Japanese imperialism and proposed to build an ideal New Korea. He asserted that such an uprising should be realized only by joining the popular vigor which had been demonstrated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with violence which was, in his view, yet to be sufficiently manifested. The successive adoption and dissemination of this notion by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in China resulted in founding two revolutionary armies and driving grassroots people's revolts. After all, the grassroots violence displayed in the March 1st Movement became the womb and origin of revolutionary violence by passing through the filter of Euiyoldan's resistant violence. Moreover, this revolutionary violence can be regarded as a new source of meaning of the ideal-typical 'anti-violence,' in that it was supposed to disappear by itself immediately after annihilating the systemic violence of Japanese colonialism and laying the foundation of peace in Asia.